

우리는 오늘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태극기가 촛불에 묻는다

새해 새아침에 던지는 원로 언론인의 自歎自省



언론은 체제전복기도 세력에 왜 눈을 감나

새벽녘 닭 울음 소리에 정유년(丁酉年) 새 아침이 밝았다. 오늘 따라 그 울음소리가 심상찮다. AI에 매몰된 신음소리인가. 선잠을 깨며 귀를 쫓긋해본다. 광화문 탄핵촛불의 여운인가. 환청인가. 눈이 뻥뻥 뜨인다. 촛불 뒤에서 불쑥 태극기를 불지르던(사진) 그 외침. “통치당 이석기를 석방하라” “사드를 철회하라”.

덕수궁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던 한 원로언론인은 탄식했다.“이건 아닌데...옛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지금 광화문은 촛불 밑이 어둡구나.”

“촛불이 정의라면 태극기는 진실이다. 촛불이

열정이라면 태극기는 냉정이다.”분노와 열정으로 가동된 집회 일수록 그 내부에서 침착한 성찰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제 최순실 게이트를 향한 분노의 행진을 되돌아보며 광장의 함성 이후를 내다보고 대비할 때다. 참여민주주의 정신을 의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틀 속으로 수렴하는 것이다. 본지는 원로언론인을 모시고 촛불의 분노와 그수렴의 길을 모색하는 긴급 좌담을 가졌다. 원로들이 자성(自省)을 털어 놓는 자탄(自歎)의 자리였다.

〈긴급 원로 좌담 2.3.4면〉



회우 100세시대 열리다

올해 백수 맞은 김진섭 회우 ‘언론 만세’

해외 원격 특별인터뷰

“언론인은 국가발전의 기수이다. 정유년 원단에 평생을 언론인으로 헌신해온 본회 회우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한다.”

2017년 새해 백수를 맞은 원로 金鎮燮 회우는 미국 LA에서 본회 회우 여러분에게 謹賀新年 인사를 e-메일로 보내왔다.

언론계에서는 처음으로 100세 장수를 누린 전설의 대선배인 김 원로 회우에게 구랍에 본회 회우들의 뜻을 모은 축수(祝壽)를 올리고 e-메일과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관련기사 18면〉

언론기념관 건립사업 순항



한국언론기념관 건립 추진에 앞서 본회 회우들이 기자촌 표지석 앞에서 촬영한 기념사진.

은평구의회, 기초예산 통과

언론기념관 건립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옛 기자촌 터에 언론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 은평구청 김우영 구청장은 구립 중순 구의회에서 언론기념관 건립 타당성과 콘텐츠 조사를 위한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중에 조사를 담당할 인사를 결정해 계약에 나서기로 했다. 타당성 및 콘텐츠 조사는 금년 상반기 중에 모두 끝나게 되며 하반기에 투자심사에 들어간 뒤 설계도 등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된다. 언론기념관의 규모는 최소한 100억원 이상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바우 만평

김성환 (본회 편집위원)



순실의 안경

謹賀新年

大韓言論人會 2017 정기총회

• 일시 : 2017년 1월 19일 (목) 오후 2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제 : 2017년 새해 사업과 예산 심의

긴급 좌담

탄핵 기각엔 ‘혁명이 정답’이라는 발상

反 대한민국 용납 안 돼

혼돈의 탄핵 정국을 진단한다



조창화



이상우



민병문



이병대

사회: 탄핵정국이 헌재(憲裁) 심판 결과에 따라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올해 치러질 제 19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두고도 국내 정치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달 20일 취임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보호무역정책 등 정책변화는 안보와 한미경제관계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우선 국내 정치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조창화: 아직 국내 정치를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 정치는 헌정사상 가장 큰 혼란에 빠져있고 안정을 바라는 국민 다수의 의사와는 반대로 진보세력이 먼저 나서 대통령선거를 착착 준비하고 있다. 반면에 보수진영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 각 정치세력은 이달 초 귀국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적극 끌어들이려 할 것이고, 반 총장은 국민의 절대적 신임과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안정을 바라고 있으며 특히 북한에 이기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대선예비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동맹인 미국보다는 대한민국의 적화를 노리며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해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다음 단계는 혁명밖에 없다고 협박한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동맹’과 ‘자주’를 구분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심히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 사람은 또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반 총장은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에게는 매우 고마운 사람이다.

사회: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부터 주말마다 대규모 촛불과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를 정치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촛불이나 태극기 뒤에 숨어 조작·확대시키면서 정국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나?

조창화: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본다. 현재 건전한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언론매체가 대한언론인회가 발행하는 ‘대한언론’밖에 없다. 공중파와 종편, 보도채널 할 것 없이 모든 방송이 오락가락하고 있고 주류 보수매체인 조·

중·동 마저 촛불민심에 타협하며 눈치를 보고 있다. 여타 보수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도 보수의 분명한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고 계속 시류에 영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모든 언론매체가 최순실 게이트 파헤치기 보도를 하고 있다지만 소설쓰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언론인회의 책임은 막중하다. 대한언론인회가 역풍을 감수하더라도 분명한 보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보수매체로서의 건전

청구로 현재의 탄핵결정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일부 야권에서 즉각 퇴진을 주장하고, 촛불시위대는 즉각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데?

조창화: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여론과 시위로 끌어 내리는 것은 여론독재, 시위 쿠데타이다. 박근혜 대통령 사퇴 요구는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시작됐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통령을 뽑았으면 임기동안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고 있다. 박 대통령을 법에 의하지 않고 하야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면 모르지만 정치권과 국민들의 강압에 굴복해서 하야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일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은 한 재임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하야시키려면 현재

에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돼 최종적으로 탄핵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따라서 여론이나 정치적 압력으로 대통령을 하야시킨다면 대한민국은 인민재판 또는 재판없이 총살시키는 북한과 다름없다.

사회: 시위로 대통령을 하야시킨다면 군사 쿠데타로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시민폭력 쿠데타인 것이 아닌가?

이상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최순실씨 국정농단이 아무리 위중한 국기문란사건이고 대통령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하더라도 헌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헌법의 5년 임기규정을 무시하고 지금이 새 대통령을 하루 빨리 뽑아야 할 긴급하고도 현존하는 국가위기사태 또는 비상사태인지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사회: ‘선거의 여왕’이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여론이나 민심파악에 남다른 능력을 보여줬던 박 대통령이 어떻게 최순실 사태를 자초했다고 보는가?

조창화: 박 대통령은 선거 전략의 귀재다. 2012년 대선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적기에 내세웠다. 경제민주화는 원래 민주당 어젠다였지만 그것을 선거 전략에 적절히 이용한 것은 박 대통령의 아이

디어였다. 물론 과거 당 대표시절 여러 선거에서 패배한 적이 없다보니 나르시즘(자기도취)에 빠지기도 했을 것이다. 최순실 사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사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나?

이상우: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밖에 없었던 미국의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배만 보고 파도는 보지 못했다.

무법적 하야 요구, 北 인민재판 연상 된다

한 ‘어젠다 세팅(agenda setting)’을 해야 한다.

이상우: 민주주의에서는 리더가 중요하다. 또 하나의 리더는 언론이다. 언론이 제 역할을 안 하니까 거꾸로 국민이 이끌고 정당과 언론은 눈치보고 영합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 다른 나라의 역사를 봐도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역할이 뒤집어져서 살아남은 나라가 없다. 대한언론인회가 확실한 리더가 돼 정당이나 다른 언론이 못했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사회: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심판

이 유권자인 국민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증오세력은 처음부터 박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데 몰두했다. 이들에게 박근혜는 처음부터 친일의 딸, 유신의 딸,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鬼胎)의 딸이었다.

여기에 최순실 사건은 이들에게 놓칠 수 없는 호기(好機)였고 지지도 5% 미만이라는 여론조사가 엄청난 기폭제가 됐다. 게다가 최순실 사건이 대통령 탄핵심판청구로 이어지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자 이번에는 법에도 없는 하야로 밀어붙

거짓 · 왜곡 보도 속에 형성된 촛불 여론

긴급 좌담

언론도 사실보도 외면

2면에서 이어집니다

이상우: 이번에 트럼프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왔어도 트럼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것이다. 트럼프의 정책을 나타내는 ‘트럼프즘(Trumpism)’에 따르면 미국이 상당한 변화를 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국제 질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했으나 이제는 특히 동아시아에서 리셋(재편: reset)되는 변곡점에 와있다. 때문에 어떤 룰이나 게임이 우리 앞에 전개될지 모를 일이다.

그동안 미국인 특히 ‘백인 근로자들(white workers)’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미국이 왜 남의 나라를 지키는 데 많은 돈을 쓰는가?”라는 생각에서부터 부익부 빈익빈의 자유경제체제 속에서 1%의 가진자가 99%의 대중을 점점 가난하게 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들 ‘분노한 백인(angry white)’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졌다. 이들의 불만에 불을 지른 사람이 트럼프였고,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의 캐치 프레이즈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 언론은 그런 트럼프를 희화만 했지 트럼프가 나오게 된 배경을 거의 무시했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설명하는 이론에 ‘클링버그 사이클(Klingberg Cycle)’이란 것이 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지만 대외정책은 약 25년을 주기로 ‘내향적 국면(introvert phase)’과 ‘외향적 국면(extrovert phase)’으로 교차해왔다는 점에 주목해 나온 이론이다. 이런 사이클을 본다면 트럼프의 ‘내향적’ 공약이 왜 나왔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흐름을 간과했다.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흐름을 잘 읽어야 한다. 미국이 무조건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사회: 그렇다면 한반도의 안보는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이상우: ‘미국 우선주의’는 되도록 밖에서 돈을 안 쓰고 국내 문제를 우선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는 경제정책은 물론이고, 외교안보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최소비용으로 미국의 군사우위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너무 잘못 대응해 왔다. 우리가 약하고 준비 안 됐다고 사정을 하면 미국이 봐준다는 식으로 접착한 게 잘못이다. 우리가 “튼튼하게 방위하려고 노력했는데 조금 모자란다 즉 98%는 했는

데 2% 모자란다”고 하면 미국이 도와줄 것이다. 미국이 동맹국을 선택하는 데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 첫 번째는 이념을 같이해야 한다는 것이다(ideological compatibility). 이념을 같이하지 않으면 정부가 해주고 싶어도 자기네 국민이 지지하지 않으니 해줄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전략적 중요성(strategic importance)이다. 미국이 적과 싸우는 데 자기네에 도움이 돼야 도와준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미국이 자

있다. 정말 실망스런 일이다. 트럼프 정부는 한미 FTA까지 손볼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우리도 금리인상이 불가피한데 가계부채 1360조원, 공공부채 645조원도 걱정이다. 우리 경제를 전망해 달라.

민병문: 새해 우리 경제는 내외외 환에 직면할 전망이다. 안으로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치적 소용돌이, 밖으로는 보호무역주의와 경(輕)무역주의 경향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긴급좌담을 하고 있는 언론계 원로들(좌로부터 본회 이병대 회장, 전 민병문 동아일보 논설실장 이상우 전 한림대 총장, 조창화 본회 고문).

선사업하는게 아니므로 동맹국으로서 응당 떠맡아야 할 부담, 즉 자생능력(liability)이다. 다 해냈는데 조금 모자란다고 해야 도와주지 아무것도 없다고 공상떨면 미국은 손떼고 나간다.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우는 소리하면 안 된다. 우리가 강하고 배짱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이 강하다는 것을 중국에 보여줘야 한다. 한미동맹이 끊어지면 닥줄 끊어

트럼프 노믹스와 영국의 브렉시트가 한국을 옹조일 것이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 등 주변 환경도 심상치 않다. 우리는 지금 경제 컨트롤 타워 부재 속에 노사 문제, 구조조정 등 현안 해결이 어려운 상태다. 이에 따라 기업은 물론 서민 가계도 앞이 안 보인다. 무엇보다 능력있는 경제부총리 중심의 팀 워크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작년부터 오름 추세로 돌아선 미국 금리 동

다. 기득권 노조만 만세 부르는 기형적 노동시장 구조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우리의 2015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7400달러. 2006년 2만 달러 돌파 이후 10년간 답보 상태다. 정치 때문이다. 정치가 잘 해야 하고 국민이 잘 감시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문제만 일으키는 시민단체 갖고는 안 된다. 언론계, 교육계,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등의 꾸준한 감시와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전경련도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문제삼아 해체만 요구할 게 아니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대기업들이야 탈퇴하면 회비 안 내 좋겠지만 전경련을 통해 사회공헌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인사 못지않게 중요한 게 꾸준한 구조조정이다. 이는 비단 기업에 국한된 게 아니고 가계도, 정부도, 관료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늦어지면서 대우해양 사태가 발생했고, 한진해운은 내버려 두었다가 정권의 말을 안 들었다고 하루아침에 법정으로 넘겨 세계 해운 7위 기업이 무너지며 당장 올해부터 우리 물동량 수송에 적신호가 켜졌다. 앞으로 철강, 유화부문 구조조정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2016년도 국내 경제성장은 당초에 3%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2.5%로, 다시 2% 초반까지 전망이 내려갔다. 그러나 아직 우리 경제가 나쁜 편은 아니다. IMF 관리경제체제 때는 외환보유고가 72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3700억 달러나 된다. 단기 외채도 그런대로 괜찮다.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했으니 미국 내 SOC 분야에서 기회를 잡는 국내 기업이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이다. IMF 당시에는 300조원이 채 안 됐는데 지금은 무려 1360조원이다. 외환위

기 당시 정부는 단단한 회복 의지를 갖고 경제각료들에 전권을 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 지도체제가 엉망이다. 기업 금융 공기업 등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 나아가야 하는지 오락가락한다.

사회: 이번 촛불시위를 지켜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조창화: TV를 통해 본 것이지만 29년 전인 1987년 항쟁에서는 시민들의 민주열망이 넘쳤지만 2016년 촛불시위에는 증오심이 끓고 있었다.

최대 수용 50만을 170만명으로 뺑뺑기 보도

진 배에 불과하다. 그 순간에 중국은 우리를 밟아 버린다. 우는 소리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에 대해서도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등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억제 및 방어 시스템 3대 축이 마련되면 필요없다는 것을 적극 알려야 한다.

사회: 국책기관이나 기타 민간연구소들이 내년도 우리의 경제성장 전망을 2% 정도로 잡고 있다. 심지어 일본 노무라연구소는 1%로 잡고

향을 살펴 국내 금리정책을 완만히 잘 짜야 한다. 고금리도 안 되지만 지나친 저금리로 마구 빔을 쓰는 추세를 막아야 한다. 가계 빔 1360조원은 금리에 즉시 반영돼 우리 부동산시장을 흔들 것이다. 지난 1,2년간 그런 정책을 쓴 게 잘못이지만 지금이라도 고쳐야 한다. 금융기관이 수익 위주로 빔을 권하는 시스템은 마땅히 고쳐야 한다. 돈 무서운 줄 알고 가계도 허리띠를 더 졸라 매야 한다. 또 기업이 돈을 벌면 민간에게 나온다는 인식, 다시 말해 웃목까지 파듯해지는 시스템이 짜여져야 한

4면에 계속됩니다

긴급 좌담

한국이 방위비 늘리고 한미동맹 강화해야

미국도 기꺼이 도와준다

3면에서 이어집니다

조창화: 아버지가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하고 딸이 ‘군중 쿠데타’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것을 기막힌 인과응보라고 쾌재를 부르는 사람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미워하는 사람들, 대통령 구속을 외치고 선동하는 사람들, 대통령을 처단하기 위한 단두대를 들고 나온 사람들, 대통령과 최순실을 함께 묻는 무덤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들, 대통령과 재벌총수들에게 죄수복을 입혀 오락줄을 묶는 ‘공연’을 축제라며 기뻐 날뛰는 사람들, 수백 대의 트랙터와 화물차를 동원한 사람들, 탄핵이 통과된 뒤 꽃을 나누어 주고 폭죽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시위 중심에 있었다.

사회: 최순실 사건과 촛불시위 보도를 보면 옛날 언론과 요즘 언론은 다른 것 같다. 요즘은 확인 안 된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허위와 과장 보도가 문제다. 루머와 괴담을 서슴없이 기사화 한다. 어떤 매체에서 기사를 쓰면 다른 매체는 확인도 안 하고 따라 보도한다. 종편에서는 집회 시작 수시간 전부터 “오늘 100만명, 130만명이 모일 것” 등으로 선동해 집회를 유도하고 시위대를 끌어모으는 기사를 내보낸다. 어떤 매체는 집회가 시작되면 스포츠 경기 중계하듯 오후 6시부

터 자정까지 보도를 이어간다. 우리 언론은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촛불시위를 지지하는 것처럼 왜곡 보도하기도 했다. 대한언론인회는 금년 상반기에 이런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세미나를 가질 생각이다.

조창화: 촛불 시위 때 주최 측은 참가인원을 너무 부풀린다. 여기에 언론은 검증이나 확인도 않고 그 참가 숫자를 경찰 발표는 빼버리고 주최 측 발표만으로, 그것도 제목으로 뽑아버린다. 일본 NHK는 한국 시위 참가자수를 경찰 발표로 보도했다. 언론은 주최 측에 대해서도 분명히 전하지 않는다. 주최 측이란 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과거 한미 FTA 반대 시위를 비롯한 광우병 촛불난동 시위, 제주해군기지반대폭력시위 등에 참가했던 50여 좌파성향 단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데도 언론은 이런 단체 이름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남대문에서 광화문까지는 인도를 제외하면 약 3만평 정도 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1평 즉, 3.3m²에는 사람 3명이 들어가면 족하다고 한다. 최고로 들어가야 6명이다. 겨울철 두툼한 외투를 입을 때는 이 인원도 아주 좁게 느껴진다고 한다. 평당 6명이 들어가면 3만평에

는 최대 18만명이 모일 수 있다. 콩나물시루처럼 10명이 들어간다고 가정해도 3만평이면 30만명이다. 인도에 최대 5만명이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차도(광장)와 합치면 35만명이다. 남대문에서 광화문까지 건물 가장자리를 포함하더라도 17만m² 즉, 5만평이 조금 넘는다. 그렇다면 설사 평당 10명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최대 50만명이다. 그런데도 우리 언론은 경찰 발표는 빼버리고 100만명, 130만명, 170만명으로 제목을 뽑아버린다. 문제는 거짓과 왜곡, 과장 보도 속에 촛불집회가 이뤄지고 촛불여론이 형성되고 확장되는 기막힌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어떤 좌성향 일간지는 “232만 분노의 외침을 거스르는 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범”이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다.

사회: 참가인원에 대한 언론의 편파보도는 참으로 문제가 있다. 촛불 집회 보도는 주최 측 발표를 따르면서도 태극기 집회는 경찰 측 추산을 근거로 보도하니 여론형성이 왜곡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제 경제문제로 방향을 바꿔 얘기 좀 하자.

경제도 컨트롤 타워 부재 속 내우외환 직면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다. 식당을 가봐도 손님이 없다. 언제쯤 이런 문제가 타개될 수 있다고 보는가?

민병문: 우리 경제를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월 100만원 미만으로 사는 가계가 전체의 13%, 100만원~200만원으로 사는 가계가 30%나 된다는 보도가 있다. 이는 서민의 팍팍한 삶을 말해준다. 자영업자는 빚을 내서 영업하는데 힘겹게 살아간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석유화학 분야는 잘 돼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이 분야 영업이익이 7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조선업도 국내 발주가 되는 등 다시 수주가 살아난다니 다행이다. 그러나 이런 분야의 호조가 서민가계에 낙수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해 안타깝다. 기득권층이라 할 수 있는 노조만이 혜택을 누린다. 정책당국이 이런 문제를 제대로 대처해 주어야 하는데 책임지려는 당국자가 없다.

사회: 지난해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없나?

민병문: 미국이 지난달 금리를 0.25% 올렸으나 우리나라는 따라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가 많은 가구들은 당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앞으로도 2~3차례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한다.

사회: 트럼프 당선 이후 우리 안보 문제가 더 심각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한 진단을 해 달라.

이상우: 안보의 통합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러한 안보 컨트롤 타워는 국방부 외 교부 통일부는 물론 경제부처까지 다 같이 연결해야하는 총체적인 것 이야하는 그런 것이 없다는 점이다. 정치나 경제보다 중요한 것은 안보다. 대한민국이 살아야 하는거고 나머지는 그 다음의 문제다. 그래서 모든 국가이익 중 안보이익이야말로 최우선적인 ‘사할적인 이익(vital interest)’인 것이다. 우리가 군사력을 증강하려면 배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조선업도 살아나고 안보도 된다. 이렇게 서로 연결하면 되는 것이다. 한미관계를 제대로 이끌려면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 그러려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국방비를 총예산의 2.5%만 쓰고 있

에 영향을 안 받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안보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사회: 말을 바꾸어 보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나?

이상우: 유동적이라고 본다. 북한을 그대로 놔두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도 이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국을 자극하려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대들면 기합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에 말려들려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 전제하에서 양국의 국교정상화를 하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양국이 사이좋게 지내자는 것이다. 그러려면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깨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사회: 현재 우리의 이 팍팍한 살림살이를 벗어날 방법은 없는가?

민병문: 부동산 문제의 경우, 금리를 낮게 해서 월세나 가계의 전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 그러나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돈의 수요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현재의 금리가 낮다보니 대출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유혹이 늘어난다. 금리나 가계부채를 전담하는 기구가만 들어지면 좋겠다. 서민가계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 정치판은 완전히 적과 동지만 있고 과거의 낭만은 사라진 것 같다. 상대방의 허점만 보이면 이를 공격해서 반사이익만을 챙기려 하고 있다. 금년엔 대선도 있고 하니 선거캠페인 등을 통해 정치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조창화: 언론이 할 소리는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기간이지만 아직도 역할이 많이 남아있다.故 박정희 대통령 무덤에는 게거품을 품으면서 참배를 반대하면서도 김일성-김정일 사망에는 애도를 표시하고 조문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종북세력에게 정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 지금 분위기로는 국가보안법 폐기하고 한미동맹 파기하고 남북연방제 통일을 하려는 반헌법 반대한민국 반미친북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가고 얼마 후 적화통일이 될 지도 모른다. 겁나는 일이다. 현재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박 대통령이 욕을 먹더라도 헌정질서를 유지하려는 세력을 아우르고 도와줘야 한다.

사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장시간 감사하다.

논단

공청회 · 토론 거쳐 포괄적 개헌 추진해야 국가개조 할 때가 왔다

촛불민심의 저변에는 국가개조를 원하는 국민적 갈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촛불은 계속해 타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 대다수가 정치에 대한 불신은 물론이고 사회경제적 부조리와 부패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가 최순실 사태로 인해 폭발한 것이다.

촛불민심이 폭발한 근본적 이유는 그동안 성공국가의 과실이 사회 전반에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기득권층 일부에 집중적으로 배분되었기 때문이다.

정치는 배타적 배제의 정치를 통해 여야가 민생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 의한 극한투쟁을 일삼았고, 경제는 재벌 지배구조의 시장에서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를 소외시켰으며, 금수저 · 흙수저 계층화로 사회적 이동성을 동결시켰다.

촛불민심은 이와 같은 국가사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치권이 찾으라는 지상명령과도 같다. 사회경제에 비해 정치가 상대적으로 후진성을 면하지 못해 구태의연한 상태에 머무르다 일어난 것이 바로 최순실 일당 국정농단 사태라는 것이다. 국민주권이 유린당하고 국민의 혈세인 국가재정이 사익에 편취 당했으며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의 정경유착 관행을 서슴없이 부활시켰다. 불통의 정치, 불신과 음모의 정치, 권력 맹신의 정치, 분열과 배제의 정치가 판을 쳤다. 정치권이 대오각성, 환골탈태하지 않는다면 촛불이 직접민주주의라 할 태세이다.

일단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히 인용되고 조기대선을 실시하여 국정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질서로 정치사회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 국민의 소망일 것이다. 현재의 탄핵 심판은 현재에 맡기고 대선은 국민과 정치권이 훌륭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되어 국민적 지지가 확고했지만 결국 국정운영 실패로 참담한 실망을 안겨 주었다.

차기 대선에서 훌륭한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은 국가개조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대통령 후보들 중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첫째는 후보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관한 것이다. 국가관, 세계관, 인간관, 그리고 이념 정향과 개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공약에 대한 메니페스토운동을 실질적으로 전개하여 국민이 참 공

송구영신의 종소리는 촛불의 물결 속에서 유난히도 힘차게 울려 퍼졌다. 지난해 병자호란과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국치의 악운을 깨끗이 씻어내고 새롭고 밝은 새 기운을 맞이하려는 듯했다. 10차례에 걸쳐 수백만명이 참여한 국민주권 되찾기 촛불시위가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시위문화축제로 승화하여 세계 시민불복종운동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정치지도자들이 실추시킨 국격의 손상을 국민들 스스로 치유하려는 고품격의 민주적 집단 지성을 발휘한 것이다.

촛불민심 저변에 깔린 국민갈망 정치권 환골탈태촉구 지상명령

대선후보 검증 제도적 준비 필요 국민사기 양양 도덕 재무장시급

약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평가기준과 제도적 장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전문가 집단과 언론기관이 협력하여 준비될 수 있다. 그동안의 대통령 후보 검증과정은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공신력 있는 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준비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 간의 TV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의 리더십과 품성 그리고 공약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갖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개조의 다음 단계는 개헌을 통한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편이다. 대선 전에 개헌하자는 주장과 개헌과 중심의 제3지대를 형성하자는 논의도 있으나 이것은 개헌에 대한 정파적 이익과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그



양승함
전 연세대 교수

하자는 주장 또한 법적 편의주의에 불과하다. 내각제는 정당정치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국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 정당의 평균 수명이 1.5년에 불과하므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다수당의 횡포와 수상의 전횡이 여전히 우려된다. 이원집중제의 경우는 권한영

역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오스트리아와 같이 협의민주주의 전통이 없어 상습적인 권력투쟁이 우려된다.

한국의 경우 제대로 된 대통령제를 실행한 적이 없다. 한국은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합하여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순수한 대통령제는 권력 분립체로서 제도와 인사가 분리되어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의 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제도적으로 분립되

을 통해 국정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 대통령 권력구조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개조의 한 측면은 경제권력의 민주화이다.

산업화 시대 대기업을 국가대표로 지원하는 패러다임을 종식시킬 때가 이미 지났다. 세계시장 경쟁 시대에 공룡기업들의 거대한 관료적 경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난 것이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사는 더 이상 국민경제가 아니다. 전문적이고 몸집이 가벼운 중소기업들을 육성하여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첩경이다. 그런데 재벌은 유휴 자본을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자하기보다는 유력한 중소기업들을 흡수 합병하는데 사용한다. 기업의 상생 협력과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키고 극단적 기업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경제적 양극화의 완화를 위한 재벌 개혁 조치 없이는 지속 성장은 불가능하다.

경제권력의 문제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부조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최순실 일당들의 빗나간 행태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고속 성장으로 전통적 가치를 적응 발전시키기도 전에 경쟁력 중심의 목적 지향적 가치관이 팽배해 있다.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과 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사회정의와 도덕성은 몰락하고 적반하장적 몰인간적 행동이 만연되어 있다. 공동체 의식이 사라진 지 오래고 자기 중심적 개인주의에 젖어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 재무장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제적 양극화와 더불어 사회계층화 현상이 구조화되면서 국민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어 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사회적 침체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이상의 국가개조 프로젝트는 성공국가의 신화를 지속시키기 위해 절대 필요하며 이러한 과업은 정치권이 솔선수범해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러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지

금까지의 분열적 배제의 정치에서 벗어나 포용과 관용의 정신으로 협치를 해야 할 것이다. 국가개조 프로젝트에는 여야없이 초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은 촛불시위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정치인들은 촛불시민들이 보여준 것처럼 향후 몇 년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한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한국의 정치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육성 서두르고 경제 민주화 강화

동안 한국의 모든 개헌은 선거 직전에 졸속으로 이뤄졌고 내용도 대부분 대통령 임기와 선출 방법에 국한되었다. 개헌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헌법이 국가의 기본 질서를 대표하고 시대적 변화와 미래를 담보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많은 공청회와 토론을 거쳐 포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로 개헌

어 있으며 입법부 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면 여당의 정부시내 역할을 상당히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상시 청문회의 설치와 감사원 기능의 일부를 국회에 이관하면 국회의 견제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더구나 대통령 4년 중임제의 채택은 5년 단임제의 결점을 보완하여 민주적 책임을 물을 기회를 주며 임기 재임

대중시위 촛불의 고향은 어디인가

“국민국가의 건설로 근대성을 확보하려고 시작된 혁명은 마지막 역사적 과제에서 이제 혼돈에 이르렀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조직화된 대중시위(mass demonstration)의

자유민주vs전체주의 아직도 무한대결 중

촛불로 표현되고, 참여자들은 도덕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대통령을 살리자는 것인지, 나라를 살리자는 것인지, 혼자 생각하면 갈피는 못 잡는 자신을 발견하는 상태가 되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 전환기거나 혼란기에 모든 사상가들이 물었던 질문이다.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새해의 물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의문이다.

70년의 대한민국 역사는 혁명사였다. 세계사의 연관에서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정치적 혁명이 첫 단계였다. (여기서 일단 북한을 제외한다) 왕조체제를 떠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여 신민을 국민으로 만든 것은 근대 국민국가라는 목표를 향한 혁명의 첫걸음이었다. 농지개혁을 통해 새로운 사회경제 구조와 새로운 정치 기반을 만들어가던 시점에 무력 혁명을 통해 전체주의 체제로 통일하려던 6·25전쟁이 터졌다. 헌정은 ‘입헌적 국가이성’(constitutional reason of state)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 강도를 달리하면서 계속되어왔다. 이를 두고 근대국가가 이미 완성되었던 것처럼 과거완료형의 사고로 정치를 비판하는 것은 현실적 판단은 아니다.

그런 조건에서 제2의 혁명이 뒤따랐다. 이른바 근대화라는 경제 발전 단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세계사적 비교 시각에서 본다면 지각한 한국의 산업혁명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달라졌다.

각자의 정체성이 혼미에 빠지는 태풍을 수반했다. 구조적으로는 산업사회의 특성상 사회 기능이 분화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민사회”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 시민사회는 처음으로 정치권력이 무엇인가를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으며, 권력과 시민사회의 갈등도 만만찮게 전개되었었다. 여기로부터 지식인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민족주의의 열풍도 일어나게 되었다. 이 민족주의는 한민족의 역사적 과제인 통일문제로 연결되었으며 국민국가의 완성이라



노재봉

전 국무총리
서울대 명예교수

北은 김일성을 ‘민중의 영웅’으로
국가적 정통성 어저지 근거 마련

자유는 노예화의 대명사 되고
한국의 진보들 여기서 감염돼

자들은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자리를 잡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다루는 곳에서 여지없이 노출되고 있다. 행세깨나 하려면, 민중·주체·사회구

위(mass demonstration)의 촛불로 표현되고, 참여자들은 도덕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대통령을 살리자는 것인지, 나라를 살리자는 것인지, 혼자 생각하면 갈피를 못 잡는 자신을 발견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 의식의 혼돈을 정리해 보기로 하는 것도 의미가 없으리라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우선 “민족”이라는 근대성의 주제어가 어떻게 한국에서 전개 되었는가를 음미해보자. 민족이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독일 문화가 들어오면서 Volk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고민에서 족민(族民)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시도하다가 마지막에 민족으로 번역되었고 이것이 우리 식민지 지식인들에 의해 한국에도 전파되었다. 이 개념은 영국·프랑스·미국과 달리 종족적(ethnic) 의미로 수용되었었다. 이의 근원은 독일의 정치적 낭만주의(political romanticism)이었다.

그에 앞서 문화적 낭만주의가 당시 일본을 위시하여 동양에 퍼지기 시작했고, 식민지 조선의 신 문화인들에게는 소외와 울분의 정신 상태에 젖어들었었다. 후진 독일의 그 사상은 후진 일본의 모델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식민지 조선에도 절대적이었던 것이다. 당시 사정으로 현해탄에 몸을 던져 자살한 윤심덕의 <사의 찬미>는 단순히 연애사건의 비극적 결말이 아니라 피와 죽음을 미학화한 낭만주의 문화의 절정이었고, 이것이 정치로 연결되었을 때, 이른바 민족은 <운명 공동체>로서 <하나>로 정의되어 혁명의 주인공으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신채호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으로 역사를 규정한 것은 그 표현이었다.

사회진화론을 합한 이 성명은 독일 민족주의의 바이블이라고 일컬어지는 피히테(Fichte)의 “독일민족에게 고함”의 조선판이었다. 피히테의

이른바 한국의 진보진영은 북한의 정체성 따져본 적 있나

는 마지막 혁명적 과제를 두고 치열한 논쟁과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현재의 정치 상황은 이런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정치혁명과 산업혁명을 지나서, 그 뒤를 이은 대통령들은 모두가 마지막 3차 혁명에 명운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아우른 강력한 한쪽의 구호가 민중을 주체로 하는 혁명적 통일 이념이었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유와 권리는 그 혁명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이렇게 형성된 사고방식은 몇 십 년 동안 정치적 사고의 방정식으로 침전되었었다. 그런 사고의 소유

성체 등의 용어는 알아야 하고 굿마당·개량한복·팽과리·장구 정도는 치고 입을 줄 알아야 민족주의자임을 자처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세대가 지금 정치판을 장악하고 있다. 구보수니 신보수니, 진보야당이니 국민야당이니 이름이야 다양하지만 언술의 내용을 보면 모두가 아무런 차이 없는 초록동색이다. 진보 대통령이니 보수 대통령이니 하는 것도 언론의 말장난이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국민국가의 건설로 근대성을 확보하려 시작된 혁명은 마지막 역사적 과제에서 이제 혼돈에 이르렀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조직화된 대중시

그 바이블의 한 장은 해방 후 한국 국어 교과서의 백미로 읽혔고, 그 향도는 독일 유학생 출신 안호상 문교부장관이었던. 독일 발 종족적 민족주의는 신채호·최남선에서 절정을 이루었지만, 그 연장선상의 안호상 박사는 종족적 민족주의를 답습해 온 북한의 조작적 단군릉을 냉전 후 몸소 참배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젊은 사람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던 피히테의 민족주의 철학에는 개인의 존재나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통령이나 나라나...갈림길의 선택

노재봉 논단, 6면에서 이어집니다

동시대 사상가로 낭만주의라는 개념을 만든 쉐레겔(F. Schlegel)이 언급한 “민족(Volk) 개념은 모든 사회 성원이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는 것이 통념화 되어 당연시 되었다.(북한헌법 제63조 참고) 이는 미국·영국·프랑스의 얼빠지고 타락한 사상과는 다른 전 인류적 사명을 걸머진 게르만의 신학적 사명으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마르크스의 세계혁명론은 이 연장선상에 선 것

의 정체성을 지성적으로 따져 본 일이 없다. 민족은 깎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은 것이다. 그 민족에 어떤 정치 또는 통치 형태를 부여할 것인가. 통치 형태가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지 않은가. 원석의 다이아몬드를 깎아 만든 통치 형태는 어떤 것인가. 동서를 막론하고 북한의 통치 체제를 규정할 수 있는 전통적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로서는 자코방주의에서 시작된 새로운 근대적 체제의 하나이다. 나치즘, 파시즘, 공산주의 체제가 그 예들이다.



광화문 광장의 촛불시위.

이었다. 그것이 그를 낭만주의의 사회철학적 천재로 치부되게 하는 소이이다.

이 모든 요소들이 조선에서 가장 잘 융해되어 나타난 것이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서’이다. 처음으로 ‘민중’이라는 개념이 이 선언서에 등장한다. 카라일의 영웅주의에 젖었던 엘리트 중심의 사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민중과 민중의 영웅에 호소한다. 〈임궏정〉과 〈장길산〉은 그것의 문학적 표현이고, 이는 올라가서 자코방에서 출발한 러시아의 〈브나로드〉 운동과 맥을 같이 하게 되고 그것이 이광수의 〈흙〉이나 심훈의 〈상록수〉로 표현되며 급기야 이종섭의 〈소〉, 이상범의 풍경화에 허리 굽은 농꾼으로 나타난다. 그런 민중의·민중으로 부터의·민중을 위한·민중

촛불이 핵불 된 것은
의식하지 못하는
죽음의 찬가이다

이것을 일컬어 전체주의(全體主義)라고 명명되었다. 한국에서 전체주의라는 개념은 냉전과 함께 사라진 개념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뒤늦게 서유럽에서 천착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왜 그토록 사회주의 핵무기는 인도주의적 무기이고 자본주의

적 핵무기는 억압 수단이라고 규정했던 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전체주의 규탄을 뒤늦게 들고 나왔는가. 술제니친의 〈수용소 군도〉의 한방에 관념적 좌익들이 여지없이 붕괴되고 말았다. 이전의 그 좌익들이 새롭게 발견한 것이 전체주의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북한 전체주의 체제이며 그 동조자들이 남한의 진보 세력이라는 것이다. 언론이 말하는 보수라는 것은 그 아류에

오늘의 내대근

이흥우 (본회 편집위원·상명대 석좌교수)



어서는 체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모순의 공통은 모두의 DNA가 되었다. 자유민주주의가 통일의 근본이 된다는 것은 아무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제 대한민국의 투쟁은 “자유민주 세력과 전체주의 세력의 대결”이라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자유민주주의는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영·미국에

우리 통일 문제로 연결된 민족주의, 현재의 정치 상황은 그 연장선

의 영웅이 없을 수 없다. 그것이 김일성이라는 상징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북한의 국가적 정통성의 근거를 이룬다.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민족적’이고 얼마나 ‘민중적’이나, 이 매력에 먼저 빠지는 사람들은 젊은 천재들일 수밖에 없다. 그 천재들은 천재라서 바보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말을 빌리자. “삶이란, 아무 의미도 없이 소리와 분노로 가득 찬, 천치들이 말하는 애기일 뿐.”

‘나’라는 개체와 그것의 자유를 말살하기 위한 자유! 그래서 자유는 노예화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에 감염된 한국의 이른 바 진보는 한 번도 북한

불과하다.

보수-진보로 정치 세력을 구분 짓는 언론의 상식이 사상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려면, 정치적 정통성에 대한 사상적 일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토대 위에 설정되는 것이 여(與)고 야(野)인 것이다. 지금 한국 정치는 여야가 동일하다. 색깔이 아무 것도 다른 바가 없다. 그만큼 사상이나 상식이 ‘통일’된 형편이다. 전체주의의 매력은 이제 촛불로 상징되기에 이르렀고, 그 촛불이 핵(核)불이 된 것은 아무도 의식하지 못하는, 정말 죽음의 찬가이다. 그런데 한편 재미있는 현상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율배반적으로 일상생활에 있

자리 잡은 정통성 이념이다. 그것을 배워가는 이 혁명 과정은 아직도 먼 길을 앞두고 있다. 정치적 낭만주의가 끝나는 날, 우리도 각자의 존재감을 가지게 된다.

북한 인권 문제가 세계적 문제로 대두된 지금, 대한민국만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회의 구성조차 난감한 웃음꺼리 문제로 남아 있다. 이런데도 관용(tolerance)을 앞세워 전체주의에 알게 모르게 동조하는 것이 자유를 위한 주장인지를 물어야 한다. 종족적이 아닌 공민적 국민 국가를 만드는 혁명의 길에 우리는 밀알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 수 없는 업보를 진 현재의 인생이다.

THE PEN

정유년 새해 첫 신문을 만
들며 600여 회우들의 격려
와 제작 참여에 “감사하다”
는 인사를 한다. 국력이 실
추된 걱정의 병신년을 보
내며 많은 사람들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침묵했으
나, 용기 있는 대한언론
인회 회우들은 풍랑
에 흔들리는 한국호
를 바로잡을 제언들을 앞
다투어 기고했다. “대한
언론만이 실어주리라 믿고 작심하
고 쓴 글”이라며 혼돈의 병신년 사
태를 분석하고 “제3의 혁명의 길
에 밀알의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글도 있었다. THE
PEN은 녹슬지 않고 무디지 않았
다. 이병대 회장 사회로 진행된 조
창화(전 회장) 이상우(전 한림대총



〈편집자의 편지〉

을 인식해야 한다”고 경
고했다. 노 전 총리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남
한의 전체주의 의식화
모순과 한계를 역사적으
로 밝히고 “국민적 국민
국가를 만드는 제 3 혁
명의 길에 이제 지식인
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
했다.

TV 토론 사회 선두주자
였던 이인원 회우(한국대
학신문사회장)는 “종편 TV 등의
두서 없고 황당한 토론이 대중을
선동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
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인원 회우는 “추측과 가상의 현실
을 실제 일어난 사건이나 사고인
듯이 전제하고 비방과 중상을 일
삼는 것은 타기할 정치적 포폴리

600원으로 회우 펜은 녹슬지 않았다

장) 민병문(전 동아일보 논설실장)
본회 회우 특별 좌담회는 정치·
경제·언론·외교 현안을 진단하
고 그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뜬여
론(浮議)·선전선동과 반란의 정
치·정치집단의 부패·국민의 도
덕적 해이를 파헤치고 포폴리즘
정치에 의해 흔들리는 국가 이념
과 정체성 회복을 역설했다. 전 한
국일보 기자로 서울대교수를 역임
한 노재봉 전총리는 “왕조체제의
신민을 근대국민국가의 국민으로
만든 건국의 제1혁명, 산업혁명의
제2혁명을 거쳐 통일이라는 마지
막 과제 앞에서 70년 대한민국 역
사가 혼돈”이라고 진단하고 “이제
대한민국의 투쟁은 자유민주세력
과 전체주의세력의 대결이라는 것

즘”이라고 힐난했다. 과거 선거 유
세장 청중 집계 경험을 토대로 조
창화·김광섭 회우는 언론의 촛불
집회 시위 참여자 수 과장보도를
고발했다. 법조 출입기자를 역임
하고 현재에 몸담았던 육정수 편
집위원이 기획한 “현재 탄핵심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도 현재의
바른 결정을 촉구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 정치학회장 재
임시에 한국정치의 분열·반란·
반동·배제의 정치개선을 지적했
던 양승함 전 연세대 교수는 정치
혁신을 통한 국가개조를 주장했
다. 양교수가 제시한 절체절명의
정치문화 개혁 과제를 정치인들은
귀담아 듣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박석홍 본회 편집위원장

알림

大韓言論 일반독자 정기구독 시행

명기자 명데스크 출신 언론인 600명이 쓰는 정론지

대한언론인회는 전직 명기자
명데스크 출신 언론인 600여명
의 협회로서, 월간 회보 ‘大韓言
論’이 편집 스타일과 내용면에서
획기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독자
들의 요청으로 발행 부수를 늘리
는 동시에 비회원 일반인의 정기

구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누구든 본회 회우
를 통하거나 직접 구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회우들께서도 주변 지인들
에게 大韓言論 구독을 권장해주
시기 바랍니다.

△접 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405호실, 대한언론인회

전화 02) 732-4797, 4798. 이메일 kjc1405@hanmail.net

△후원 구독료: 연 3만원.

△입금계좌: 농협 056-01-105628

회우 칼럼 - 어제 오늘 사이

독버섯 포폴리즘과 종편



이인원

한국대학신문사 회장
전 문화일보 사장대행

민주주의 이상은 모
든 자의적인 권력을 억
제하는 것이다. 우리 현
실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민주주의는, 대중
주의 즉 대중의 인기
영합하는 대중을 동원
해 정치권력을 창출하
거나 유지하려는 대중
영합주의 정치의 성향
이 농후하다.

‘민주주의 정치제도
는 인기를 먹고 성장한
다’는 말이 있듯이 현대
정치는 대중의 환심을 사는 일이 정
치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게 돼서
위험하다.

이른바 포폴리즘(populism) 정치
속에서 민주주의는 타락해 중우정
치가 돼가고 있다. 중우정치는 정치
꾼들이 국민을 바보로 보고 조작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가와 사회의 올
바른 발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실현성 없는 거짓말이나 제 살
깎아 먹기식 근시안적 이익을 내세
워 대중의 환심을 사서 정권을 쟁취
하려는 데 여념이 없다.

유권자의 환심을 살 수 있다면 국
가 장래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

시키고 있다. 결국 인
기주의나 이상주의가
(이상주의는 현실적으
로 실현이 불가능한 것
이다) 정책적 대안과 이
성적인 판단을 압도하
는 사회로 전락할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 요즘
폭주하고 있는 종편TV
등의 두서없고 황당한
토론은 사실에 근거한
토론이 아니다. 추측과
가상의 현실을 실제 일
어난 사건이나 사고인

듯이 전제하고 그 토대 위에서 자기
들의 의견을 마구 토해내는데, 이런
식으로 대중을 선동해 무엇을 얻고
자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비방
과 중상을 일삼는 모습을 토론이라
고 하면서 입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
것이야말로 정치적 포폴리즘의 대
표적인 예이다.

우리가 지금 이만큼의 민주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의 두
가지 기반인 경제적 성장과 안전, 그
리고 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식이 고양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성장의 토대를 이룬
정권은 탄생해 안 될 정권이었다고

대중을 선동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으며, 다수의 대중이 원한다면 그대
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한
다. 포폴리즘은 지혜는 대중 속에 있
고 정치적 제도는 대중의 의지와 일
치해야 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이
때 대중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할 수
가 없으며, 또한 대중의 목소리는 항
상 다양하고, 집단 이기심의 발로 일
수 있으며, 선의의 경우라도 편견에
사로 잡혀 있고 경솔하고 무분별하
기 일쑤다.

더구나 정치적 포폴리즘은 이성보
다 감성에 호소한다. 기분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대중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속죄의 양’을 찾는
다. 나라가 잘 못되고 경제가 어려운
것은 이들 ‘속죄의 양’ 때문이라고 외
친다.

특히 정치적 포폴리즘은 전문 엘
리트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래
서 전문가와 아마추어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침몰한 배를 인양하는
데 전문가가 아니라 유족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현상도 일어난다.

그 밖에도 정치적 포폴리즘은 비
합리성의 정당화, 법 위에 타협과 협
의가 힘을 내는 민주정치의 기반인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경찰차를 파괴하는 불법적인 데모
도 대중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공공
연히 자행되고 있다. 개성만 찬양하
고 사회의 근본인 통합기능을 마비

주장하고 교육에 이바지한 일부 학
자들은 반민족적 인물로 규탄하면
서 민주주의를 외친다는 것은 모순
이다. 포폴리즘의 등을 타고 용도가
사실상 폐기된 이상주의적 이념이
나 사상을 고취하려는 세력들이 사
회 저변에서 독버섯처럼 성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정치에 어
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상은 언제나 부분적으로밖에 이
룰 수 없다는 인식을 뛰어넘어 어떤
형태로든 혁명적으로 개혁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변화와 발전이 아닌
또 하나의 혁명 대상을 만들어낼 뿐
이다.

민주주의는 서서히 꾸준히 발전하
는 정치제도이다. 민주주의는 하나
의 교육과정일 뿐이다.

나는 정치학자 R.M. 매키버 교수
가 말하는 민주주의를 사랑한다.

“민주주의는 한 단계 한 단계씩 전
진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움직
이면서, 때로는 주저하며 때로는 혼
란에 빠지면서, 그러나 끊임없이 변
화해 나아가는 현재의 맥을 느끼면
서 그리고 언제나 무엇을 추구하면
서 또한 체제의 약점을 결코 잊지 않
고, 그 잘못을 시행하는 데 인색하지
않으며, 항상 큰 뜻을 품으면서, 그
러나 결코 ‘완수’하지 못하며 오랜 시
일에 걸쳐 나타나는 방식이다.”

친환경 로하스로 헬스 & 웰빙
ILDONG 일동후디스

첨가물 없는 진짜 그릭요거트
함께 즐겨요

후디스 GREEK



인공첨가물 없이 그리스전통 홈메이드 방식으로
제대로 만든 후디스 Greek 요거트~
떠먹는 그릭요거트에 이어 간편하게 마시는
그릭요거트도 국내최초로 선보입니다.
아침대용식이나 영양간식으로 건강하게 즐기세요

유청을 짜지 않는 농축방식 우유 본연의 영양이 풍부한 유청을
짜버리지 않는 농축방식으로 만들어 단백질은 물론 칼슘도 2배!
영양손실이 없어서 더 좋아요

후디스 GREEK

• 주문 및 상담: 02)2049-2000 www.foodis.com



Special

함께 모여 특별하고

[1인 창조기업인 공동주택 **도전 속**]

Heart

다같이 열정을 나누고

[예술인 협동 조합주택 **막춤**]



Safety

누구나 안심되고

[여성안심주택 **천왕여성안심주택**]

Hope

새로운 희망을 키우고

[공동 육아주택 **이음채**]

[모자 안심주택]



Smile

언제나 즐겁고

[대학생 기숙사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Harmony

행복한 하모니를 만들고

[홀몸어르신 공동주택 **보린주택**]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서울 주거행복전문가 SH공사입니다



천만 시민 모두를 위한
SH공사의 맞춤형 공동체주택

- 청년·대학생 1인창조기업인 공동주택, 대학생 공공기숙사 공급으로 청년들의 꿈을 키워줍니다.
- 여성 독신여성 및 육아여성 안심주택, 공동육아주택을 통해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듭니다.
- 어르신 홀몸 어르신들에게 주거공간 공유 주택을 제공하여 이웃과 함께 나누고 화합합니다.
- 예술인 안정된 주거 및 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재능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SH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www.i-sh.co.kr

탄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재, 졸속결론 안 된다

선동기사 자제했으면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갔다. 준비절차를 통해 쟁점정리에 들어간 데 이어, 공개 법정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의 참여하에 증인신문 등 본안에 대한 열띤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옛날로는 역성혁명(易姓革命)에 해당하는 국가대변사이고,

미·중·일·러 등 주변 4강의 세력 균형에도 큰 영향을 줄 국제적 중대사이다. 중국에서는 ‘사드 탄핵’, ‘박통의 최후’라 하고, 일본에서는 이범준 기자의 ‘헌법 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한다’의 일본어 번역판이 중고서까지 벌써 매진이라 한다.

탄핵소추 결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인 대통령을 부를 수도 있지만, 응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한다.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는 6명의 재판관 찬성이고 소수 의견도 결정서에 표시한다. 판례에 의하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은 그 자체로서 탄핵사유가 될 수 없고, 형식적으로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 때에 탄핵사유가 되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때라고 하였다. 재판부가 할 일은 적법절차의 존중이다.

다산 선생의 목민심서에도 송사에서 성의 있게 듣는 것이 기본이라 하였다. ‘한쪽말만 듣고 상대방의 말은 들어보나마나 뻔하다’고 선입관을 갖고 성의 없는 재판은 안된다는 말이다. 독일기본법은 ‘재판에 있어서는 누구나 법률상의 심문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하며, 소추인만이 아니라 피소추인에게도 심문권을 인정한다. 미국연방헌법도 ‘국가라 하여도 법의 적법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

법치 과정 존중·승복해야



육정수
본회 편집위원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낸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회가 내세운 탄핵 사유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입증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지지율이 4~5%로 유례없이 낮고 100만이 넘는 국민 집회에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의 의사가 분명

해졌다’고 한데 대해 “그렇다고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반(反)헌법적 발상”이라고 맞받았다. 박 대통령의 기존 사과 자세와는 상당한 차이가 느껴진다. 변호인단의 검토 결과 기각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나름대로 판단한 것 같다. 어쨌든 탄핵소추를 받아들여느냐(인용), 받아들이지 않느냐(각하 또는 기각)를 결정할 심판을 둘러싸고 양측의 공방(攻防)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현재는 첫 단계로 양측을 불러 국회가 소추한 9개 탄핵사유를 5개 유형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다짐했다. 흔히 ‘정치재판’이라고 하면 부정적 인상을 받기 쉽지만 현재 심판 대상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갖는 사건이 많다.

재판관도 정치적으로 구성된다. 9명 중 재판소장을 포함한 3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3부가 정치적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이다. 또한 탄핵심판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징계 종류의 하나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관들의 평소 이념성향보다는 최순실 사태에 대한 ‘법리적 판단’ 외에 ‘정서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즉

재판 압박은 옳지 않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최순실 사태에서 비롯된 국민들의 촛불시위가 압도적 다수에 의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이어졌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압도적 다수로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시간 끌 것 없이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며, 법적 요건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즉 변론을 통해 국회의 탄핵사유와 대통령의 반론을 종합하는 가운데 법적 증거에 입각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치 여론재판을 요구하듯이 다수의 힘으로 재판결과를 압박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최순실 사태를 통해 확인된 대통령 자신의 불법에 근거한 것이며,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서게 만들었던 관련 언론보도 및 검찰의 공소장 등이 정확하다면 헌법재판소도 탄핵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국민의 촛불 때문에 법적 판단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불법 때문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게 된 것이고, 그러한 불법을 헌법재판소도 똑같이 인정할 경우 별개의 판단이 내려질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오류는 없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며, 대통령 측에도 반론의 기회는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태블릿PC, 녹음파일, 업무일지 등의

헌법·소신의 역사적 결판을

자유나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적법절차란 듣게 할 기회의 제공이다. 우리 헌법의 ‘법 앞의 평등’은 법관 앞의 평등을 말한다. 청구인만이 아니라 피청구인도 자기의 입장을 진술하고 증거를 낼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함을 뜻한다.

대통령 탄핵절차는 위법행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와 맥을 같이한다. 공무원법상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앞서 징계대상자의 진술권보장인 청문절차를 거친다. 하물며 국민의 다수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징계하는 탄핵절차에서 공정·충분의 절차권 보장 없이 국민의 여망부응이라는 명분으로 졸속의 결론을 내린다면 사법적 정의와 법치주의는 실종될 것이다. 검찰, 국회 특조위, 특검 등의 기록만도 엄청난 것을 감안해야 한다. 국민도 재판관이 헌법·법률에 따라 엄정중립의 냉정한 재판을 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재판소 주변에서 다중이 찬·반을 표시하는 고성과 열기는 자제가 필요하다. ‘여론재판’을 유도하는 선동성 기사나 ‘기각이면 혁명’의 협박조는 금물이다. 세계가 주시하는 재판이라면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탄핵 심판은 단심이며 최종심이다. 그러나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남아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간 길어지면 기각 가능성

민심과 증거판단의 일반 원칙 외에 국정(國政)의 안정 및 국가의 장래 등도 도외시할 수 없는 게 현재의 고민일 것이다. 그만큼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 그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더 많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하지만 유리하다고 볼 유력한 근거라고 할 수는 없다. 대다수 국민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재판관들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심판기간이 1, 2개월을 넘어 의외로 길어진다면 기각 가능성의 신호일지도 모른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치(法治)를 부정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현재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구현하고 수호하기 위한 최고 재판기관으로서, 법치의 기둥이라 할 수 있다. 어떤 결론이 나든 각 정파(政派)와 모든 국민이 법치의 한 과정임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 현재 결정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징표가 될 것이다.

헌재에의 국민적 신뢰훼손 우려

증거의 인정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는, 엄밀하게 볼 때 일종의 징계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보도가 전혀 사실무근이 아니라고 볼 때, 그리고 검찰의 법률적 판단에 대해 신뢰를 가진다고 할 때,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중대한 불법의 인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한 섬세한 심판절차는 필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 및 현 시국의 위기상황을 장기화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충실한 심리속에서도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며, 특히 재판관의 임기만료로 인해 심판이 파행으로 치닫게 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성숙한 민주국가 국민의 기본 도리이다.

언론을 말한다

Inside Journalism

미디어

촛불시위 숫자 정확하게 보도하라

지난 연말 한 달도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도배를 하였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됐다. 이제 현재의 심판이 남아 있다. 그러나 언론은 사안의 큰 줄거리에서 벗어난 대통령의 미용문제와 의료기술에 대한 시시콜콜한 내용을 줄기차게 보도하고 있다. 신문보다 종편 채널은 더 하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파헤치는 데 몇몇 언론이 큰 역할을 했지만, 서로 한 건 더하려는 욕심으로 지나치게 나간다. 그동안 공적이 퇴색하고 있다.

촛불시위는 큰 역할을 했다. 촛불은 평화적이고 축제적인 분위기로 시위문화를 한층 성숙시켰다. 앞으로의 시위문화에서 희망을 보이고도 있다. 그러나 많은 촛불시위자들은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현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당장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욕박지른다. 야당과 촛불시위자들은 현재 결정도 빨리 하라고 다 그친다. 현재 재판관들은 압력을 느끼지 않고 충분히 숙고해 객관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압박감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시위장에서는 현재의 통진당 해산결정을 무효화하라는 주장과 통진당 깃발도 펄럭인다. 언론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현재 재판관들이 충분히 숙고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돌아오는 ‘현재 앞 촛불시위도 법대로 해야 하는 사실에서 “현재 재판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탄핵안을 심리하도록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언론은 촛불시위 참가자를 1백만 명, 2백만명이라고 한다. 시위참가자 숫자는 주최 측 주장도 있고 경찰 추산 집계도 있다. 언론은 처음 경찰

신문시평



김광섭

본회 편집위원
전 중앙일보 편집국부국장

황 대행 과도정부 헌법위임 따른것 위급한 상황에서 최종 의사결정

‘탄핵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는 생각 위험수위 높은 강경발언 안보관 경계

미순 사건 ‘광우병 난동’ ‘천안함 폭침’ ‘강정 해군기지’ ‘세월호 사고’ 등에서의 촛불이 전체 국민의 여론이며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지 의문을 표시했다. 촛불에 올라탄 야당은 이제 ‘혁명’을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 문재인씨는 “이번에 촛불 혁명의 힘으로 제대로 바뀌보자”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면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고 했다. 일부 언론은 문씨의 과격해지

니다...”라며 문씨의 위험한 안보관을 경계했다.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책임총리임명’과 ‘거국내각구성’ 방안이 대두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등의 이런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 대통령의 빠른 퇴진과 조기 대선이 문재인씨 측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이다. 대통령 탄핵안 국회가결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불러온 건 야당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은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 코스프레’를 한다며 그도 ‘탄핵감’이라며 빨리 물러나라고 압박한다. 황 대행까지 물러난 후 국정공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라도 있는지. 야당은 황 권한대행을 압박해 국회에 출석시켜놓고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그러나 국정에 대한 질의보다는 그의 기를 꺾으려는 듯 개인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문화는 ‘황 대행 5시간 묶어놓고 막말, 저질 질문 쏟아낸 야’라는 사실에서 “...황 대행은 국가의 모든 위급한 상황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임무를 헌법에 의해 부여받고 있다... 야당들은 그런 황 대행을 억지로 국회에 불러놓고 시정잡배도 공식 석상에서는 하지 않는 저질 표현에다 막말까지 일삼았다... 5시간이나 그를 붙잡아 뒀는데 정작 의원 300명중 30여명만이 자리를 끝까지 지켰을 정도로 무관심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國害’의원”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중앙도 ‘황교안 대행 그만 흔들고 힘 실어줘야’라는 사실에서 “황 대행이 과도정부를 이끌고 있는 것은 헌법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며 일부 재야와 야권의 황 대행 흔들기와 일부 시위행렬이 총리공관 100m까지 진출해 사퇴를 압박한 것을 경계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사실에서 “황 총리의 ‘대통령 놀이’ 더는 안 된다”며 황

현재 공정판단 언론이 분위기 이끌어야

추산 숫자도 밝히다가 나중에는 주로 주최 측 주장 숫자로 보도했다. 언론이 참가자 숫자(팩트)를 부풀려서는 안 된다. 1971년 대선 때 야당의 김대중 후보와 여당의 박정희 후보가 장충단공원에서 유세대결을 벌였다. 양측 모두 청중 숫자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일부 신문은 경찰추산 집계로 청중수를 밝히고도 더 정확한 청중수를 집계하기 위해 1㎡당 청중수와 장충단공원 면적을 곱해 군중의 수를 계산하려는 노력을 했다.

류석춘 연세대 교수는 ‘조선칼럼’에서 “전체 국민 여론은 반드시 촛불과 동일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며 ‘효순,

는 발언을 주목하며 ‘촛불혁명’이 정권교체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보수노선을 일거에 폐기하고 ‘좌파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경계했다.

문화는 ‘야, 선두주자 문재인인의 남 탓과 위험한 안보관’이라는 사실에서 “문씨는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개성공단 폐쇄 등을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은 대외정책의 연속성을 희망한다며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지금 국민다수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대통령 비리 탓이지, 외교, 안보, 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은 아

대행이 한국마사회장을 임명한 것 등을 비판했다. 광화문의 촛불은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을 심판했다. 그러나 이런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의 친박, 비박의 진저리나는 싸움과 사사건건 국정발목을 잡은 야당의 무책임이 면책되는 건 아니다. 촛불은 여의도에서도 타오를 수 있다. 정치권과 국회가 개혁을 하지 않고 무능, 파당만 일삼는다면 언젠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언론은 이밖에 최순실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테블릿 PC에 대한 진실공방도 철저히 취재해 사실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달의 Focus

왜 태극기는

‘촛불’은 ‘민심’이

태극기를 들고 나선 또한편의 민심집회를 외치는 촛불집회가 여전히 기세를 떨치고 있다. 보수 측에서 ‘탄핵반대’를 주장하며 태극기를 들고 나선 집회도 있다. 그러나 언론에선 ‘맞불집회’라 명명하고 있다. 겨우 촛불을 끄겠다는 태극기의 물결이 도도히



이달의 사실

“탄핵 기각
문제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랍 17일 치인에게만 맡겨서 가능할 수 없다”며 “이날 차기 대선의 유력한 야권 주자인 문 전 대표명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헌법은 국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최상의 원칙이다. 헌소추돼 직무정지에 들어간 것도, 국회가 심판을 진행 중인 것도 다 헌법에 따른 것이므로 따라야 하는 것 또한 헌법 정신이자, 이는 일부 정치인들이 있다고 해도 문 전 대표의 분노와 요구를 제도의 틀 안에서 수렴해보다 촛불을 더 중시한다면 차라리 시민혁명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가 대청소 직 정치부터 청소해야 한다”고 한 것은 문 전 대표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돼 북한을 보겠느냐’는 질문에 “주저 없이 말한다. 나는 안보관의 일단을 보여주는 듯하다. 노무현 회담을 해 실질적 효과가 없었다는 인식에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나 협상으로 북

것은 환상일 뿐임을 그간의 역사가 웅변한 안보가 우선순위”라며 야당은 사드(THAAD)를 막아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 문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돼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결정하겠다는 의미인가.

문 전 대표가 선동적인 발언을 거듭하는 지지율에 고착된 반면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한동안 중도 보수층을 어떤 발언이 진짜 문재인인지 국민은 궁금

광장

Inside Journalism

언론을 말한다

언론에서 작아지는가

이라며 ‘태극기’ 인파는 ‘맞불’로 축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도 ‘즉시 하야’

극기시위를 펼치고 있고 규모도 있는데

우 맞불정도 일까.

이 흘러 일촉즉발의 긴장감을 북돋고 있다.



만약이면 혁명밖에 없다”는

인의 反헌법적 발상

7일 울산 촛불집회에서 “새로운 세상은 정

변에는 시민혁명을 완성하자”고 주장했다.

표가 현재 결정에 불복(不服)하거나 ‘민중혁

위험하다.

의 규범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도, 현재가 탄핵

이다. 만에 하나 현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더

민주주의의 법치다. 촛불민심에 영합하려

표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정치인이라면 광장

해결하는 진정한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

명가로 나서는 게 옳다. 김한길 전 민주당

를 말하려면 패권주의 정치, 패거리 사조

전 대표를 겨냥한 지적이다.

한과 미국 둘 다 갈 수 있다면 어딜 먼저 가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답한 것도 위험한

전 대통령이 2007년 임기 말에 남북정상

서 문 전 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

핵 문제를 해결하거나 북을 변화시킨다는

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최근 호도 “한국

(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발

를 다음 정권으로 연기하라고 주장한 문 전

우 국가 안보야 어찌되든 사드 배치도 물어

것은 대선주자 여론조사 1위임에도 20%

장이 독설을 날리며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

발언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서는 국민의

을 겨냥해 ‘안보 행보’를 보이던 문 전 대표의

하다.

(동아일보 12월 19일)

재허가 앞둔 ‘종편 5년’ 功과 過

방송시평



유 자 호

본회 편집위원
전 KBS 파리 특파원

요즘 가장 잘 팔리는 콘텐츠는 두

말할 것도 없이 박근혜-최순실 게

이트이다. 종편들은 이 먹잇감을 향

해 무자비하게 달려들었다. 뉴스와

토론의 거의 대부분을 이 아이템으

로 채우며 물고 흔들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 막말, 비난, 선정성, 편

파, 오보 등이 난무했고,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무죄 추정의 원칙

은 무시됐다. 박현태 전 KBS 사장

은 언론의 이런 행태를 ‘하이애나 저

널리즘’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제

종편은 ‘정부 편향’이란 이미지 변신

에 성공하며 시청자증을 늘려가고

있다.

여기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은

지난 5년 종편의 행보는 철저히 시

장의 논리를 따랐다는 것이다. 출범

초기 종편은 허가를 해준 정부

의 도움으로 버텼다. 이후 ‘전문

편성’을 주장하며 시사토론 프

로그램의 대폭 편성으로 경영의

위기를 극복해나갔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박근혜 대통

령의 지지율이 형편없이 추락하

자 박근혜를 버리는 것은 시장

원리상 이상할 것이 없다. 종편

추측·막말·비난·편파·오보·선정성
이빨 드러낸 하이애나 저널리즘

시사프로 대폭편성 경영위기 극복
폭로와 충격요법으로 어젠다 선점

518%까지 인정해주며 종편의 생존

을 도왔다. 즉 100만원의 광고비로

600만원 상당의 광고를 편성해줌으

로써 광고 유치를 용이하게 해준 것

이다. 모(母)신문도 종편의 광고 유

치를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종편은 보수 정권 재집권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보험이었을까?

2012년 대선 때 종편들이 야당 후

보에 불리한 보도들을 쏟아내자 야

당은 종편 출연 거부로 대항했다. 그

이제 박근혜 이후를 겨냥하는 것인가

많이 드는 뉴스 보도 위주의 편성을

시사 토론 프로그램의 확대 편성이

라는 편법을 써서 재정 적자를 극복

하고자 했다. 또한 신문들 모(母)기

업으로 하고 있는 특성상 신문 기자

들을 시사 토론에 대거 투입하기 시

작했다. 이와 함께 이 종편 저 종편

을 넘나들며 사회자 또는 패널로 뛰

는 이른바 시사평론가들이 넘쳐나

는 시대가 되었다. 지난 연말에 만난

한 시사평론가는 아예 종편사들 근

처에 사무실을 두고 부름에 응하고

있다면서, 하루에 두~세 탕식을 뛰

느라 눈코 뜰 사이가 없다는 것이었

다. 정부도 종편의 광고 보너스율을

려나 박근혜 정부 첫 해였던 2013

년 7월, 종편의 월 평균 시청률이

1%를 넘기자 야당은 종편 출연 금

지를 풀었고, 2014년 3월 종편들은

방송 사업 재허가를 받았다.

과연 종편은 보수 정권의 영원한

보험일까? 2014년 세월호 참사 당

시 JTBC 뉴스룸은 손석희 사장이

팽목항에서 방송을 진행하면서 4월

28일 시청률이 종편 사상 처음으로

5.06%를 기록했다. 5월에는 JTBC

가 지상파 3사를 제치고 신뢰받는

방송사 1위(리서치뷰)로 등극했다.

종편 뉴스들을 무시해오던 지상파

로서는 충격이었다.

편 기자들에게 돌아갔다.

종편은 재허가를 앞두고 있다. 출

범 5년, 시장의 논리를 따라 생존해

온 종편의 공과는 어떻게 평가될까?

경향신문 사장을 지낸 심상기 서울

문화사 회장은 대한언론이 펴낸 <취

재 현장의 목격자들>에서 “언론계

숙정에 앞장선 사람들은 모두 언론

계 출신 인사들이었다”고 증언했다.

SBS 허가와 종편 허가도 언론계 출

신 인사들이 주도했다. 한국 방송계

는 대략 10년을 주기로 변화해왔는

데 그 원인은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였다. 역사는 반복될까? 두고 볼 일

이다.

김영란법 파장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민간 공익재단의 언론인 국내·외 연수와 저술 지원을 금지한다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방일영문화재단, 삼성언론재단, LG상남언론재단 등이 2016년 하반기부터 주요 사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이다.

이들 민간 공익언론재단은 현재 연간 예산이나 사업 비중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주요 사업이었던 장·단기 해외연수와 어학연수 및 저술지원 등이 보류되면서 전체 사업의 90%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됐다.

이유는 이들 법인이 기업이나 기업의 대표가 출연한 자금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사가 기업의 돈을 받고 저술을 한다거나 해외 연수를 하는 것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금품수수에 해당한다는 것.

권익위는 지난해 9월 8일 제시한 가이드 라인에서 언론인 해외연수·어학교육·저술출판 지원 등은 △특정 직종에 국한된 지원인 점 △지원 금액이 통상적으로 1년에 1인당 500만원을 넘어서는 점 △연수 비용의 재원은 특정 기업 또는 기업 대표자가 출연한 금전인 점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여부에 민간기업이 설립한 언론재단 이사진이 관여하는 점 △해당 기업의 기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그러나 준정부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처럼 언론인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중견 언론인들의 친목단체인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종전처럼 언론인 지원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관훈클럽은 다만 문제가 된다면 법원에 이의를 신청, 법률적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이 지원한 민간 공익언론재단 역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국내외 연수 등을 위한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권익위가 언론인 연수 지원을 금지한 삼성언론재단이나 LG상남언론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합법적인 공익재단이다.

이에 대해 A 민간 공익언론재단의 한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라는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권익위의 가이드 라인이 바뀌지 않는다면 언론인 국내·외 연수나 저술지원 사업은 접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익재단의 언론인 연수지원이 기업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도 오히려 장려돼야 할 일이라면서 언론인 연수는 국민의 눈과

권익위 법조문 확대해석 언론기능 위축 우려된다



서옥식

본회 편집위원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민간공익 언론재단 기자
국내외 연수 등 불가능해

삼성 등 합헌적 설립 불구
2017년 지원사업 잠정중단

귀가 돼야 할 기자들의 전문화와 국제화를 위한 재교육 기회라고 강조했다.

B 민간 공익언론재단 관계자는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판·검사와 국공립 교원을 포함한 일반공무원, 군인·경찰관은 물론 사립교원도 재직시 철저한 신분보장과 함께 국내외 위탁교육 등 연수기회를 갖지만 언론인은 전문 직업인이면서도 사실상 재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민간 공익재단의 언론인 지원 사업은 건전한 언론문화 신장에 이바지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언론인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일종의 재교육-재충전 장학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C 민간 공익언론재단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도 후진국은 법제정을 통한 언론인 교육과 복지를 위한 기금이 마련되고 있으며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도 민간재단이나 자선단체 설립 등을 통한 언론인 지원제도가 있다고 소개했다.

민간 공익언론재단들은 현재 권익위의 가이드 라인에 이의를 제기,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기다리며 대책 마련과 함께 신사업 발굴을 모색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여기자협회는 지난해 공동성명을 내고 “김영란법과 시행령에는 기업의 언론인 연수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유추해석”이라며 “언론인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공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면 법의 취지를 살려 역량 강화와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이익 되돌리기를 금품수수로 보는 것이 문제

〈표〉 민간 공익재단과 준정부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인 지원 사업(2016년)

해외연수	삼성언론재단	1년간 16명, 5000~6000만원/인
	성곡언론문화재단	통상 연간 5~6명이나 2016년은 3명, 하바드대 기준 5500만원/인. 미국 미주리대·일본 게이오대는 협약에 따라 등록금 면제하고 체재비 각각 약 3300만원
	LG상남언론재단	1년간 10명, 6000만원/인
	SK	1년간 7명, 5000만원/인
	KT	1년간 5명, 5000만원/인
	교보생명	1년간 5명(보험전문기자), 5000만원/인
	관훈클럽	1년간 3명, 약 4540만원(왕복항공료 별도 지원)
저술지원	SBS문화재단	△ 서울대 행정대학원(1년)과 외국 협력 대학(1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수학경비 전액, 외국 협력 대학 수학시 본인 왕복 항공료와 수학경비, 체재비포함 연 5만1000달러 △ KDI국제정책대학원(1년6개월-2년) 또는 KDI국제정책대학원(1년)과 외국 협력대학(1년) KDI국제정책대학원 수학경비 전액, 외국 협력 대학 수학시 본인 왕복항공료, 수학경비 포함 연 5만1000달러 △ 서울대 대학원 미술경영협동과정(최대 2년)과 본인이 선택한 해외 유명 대학이나 관련 기관(6개월) 서울대 대학원 수학경비 전액, 외국 대학 수학시 본인 왕복 항공료와 6개월 이내의 해외 수학경비 포함 2000만원 이내
	한국언론진흥재단	1년간 9명, 약 4850만원/인
어학연수	삼성언론재단	9명(전·현직), 600만원/인
	관훈클럽	13명, 저술 500만원, 번역 300만원, e-book출판 100만~150만원
어학연수	삼성언론재단	3개월간 5명, 2000만원/인
	LG상남언론재단	10주간 17명, 2000만원/인

다시 덜미잡힌 국사교과서 국정화...이대론 안된다

역사 교육 바로 잡아, 국가정체성 혼란 종식시켜야



박 석 흥

본회 편집위원장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대우

대한민국은 제1 공화국의 혁명적인 건국과 제3 공화국의 산업화 제2 혁명을 밑거름으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헌법개정에 의한 민주화로 선진국에 진입했다. 김영삼(YS) 후보가 1992년 대통령 직접선거에서 당선, 5.16쿠데타 후 32년만의 민간 정부 출범이 민주화의 획기적인 전기가 된 것이다.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분야에서도 민주개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이 향상되었으며 언론기본법, 사회안전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등 비민주적인 법률에 대한 개폐 작업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민중운동의 주역들이 정치 주체로 부상하고 '민주화'가 정치 구호로 변질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 논쟁이 부상했다.

YS는 취임 후 첫 삼일절 기념식에서 “동맹보다 민족이 중요하다”고 공언하고 문민정부의 정통성을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이어 받은 것으로 선언함으로써 제1 공화국의 건국 정통성 논란을 공식화했다.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김대중(DJ) 대통령도 6.25전쟁을 ‘실패한 통일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제2 건국위원회’를 만들어 제1 공화국의 건국 승계를 대체하는 대안을 천명했다.

386운동권이 주축이 된 노무현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 혹은 ‘특권과 반칙의 역사’로 평가절하했다. YS·DJ·노무현 대통령들의 이데올로기와 새 정치 이념에서 비롯된 대한민국 정통성 시비와 역사 논쟁은 YS 정부의 제 6차 교육과정 국사교과서 개정 시안으로 구체화되었다. 1994년 3월 문민정부 교육부가 낸 ‘국사교육 내용 전개 준거안’은 반국가 행위로 규정했던 ‘대구 폭동’ ‘제주 4·3 사건’을 ‘10월 항쟁’과 ‘제주 4·3 항쟁’으로 바꾸어 기술하자고 제시했다. YS 정부가 시작한 역사 교과서 좌편향 수정 작업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MB)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MB 정부 안병만 교육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가 보급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253개 항목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157개 항목의 왜곡을 수정하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MB 정부가 임기 말기에 펴낸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는 829건의 오류가 논란이 되었으며 “이승만·박정희 정부에게는 반감을, 건국 방해 세력에게는 호감을, 북한 정권에게는 동정심을 갖게하는 교과서”라는 혹평(조갑제평)을 받았다. MB 정부가 검인정한 문제의 한국사 교과서는 브루스커밍스의 수정주의 사관을 신봉하는 필진들이 대거 참여해 평양 주둔 소련군 사령관이 남로당에게 자금까지 지원했던 10월 대구폭동·5·10 선거 거부 등의 반역까지 민중 봉기로 왜곡 기술한 것이다. 국가 정통성 시비는 분단 책임론에서 시작됐다. 1946년 3월 20일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으나 임시정

정권 입맛따라 왜곡된 역사교육
진국정통성 부정, 국론분열로
수정주의 사관에 순치된 운동권
대한민국사 평가절하

부 수립 협상이 결렬되고 5월초 휴회하자 이승만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안을 제시했다.

1946년 6월 3일 이승만은 정읍에서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소련 점령군 지도로 북한에 1946년 2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위원장 김일성)가 조직되어 본격화된 소련의 분단 획책을 막기 위해 제안한 이승만 대통령의 정읍 발언이 오히려 남북 분단의 단초가 됐다고

한 8종 한국사 교과서의 오류가 829건이라고 분석 발표했다. MB정부가 만들어 박근혜 정부가 보급한 일부 국사 교과서는 전교조사관이 대폭 반영 된 것으로 노무현정부가 만든 것 보다 더 좌편향사관 성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사회 문제가 됐다.

국민의 역사인식이 지난 20년처럼 혼란스러웠던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좌편향 정치 이념의 대한민국사 폄하와 중국 일본 북한과의 역사 전쟁 및 국사학계의 민중사관의 도전으로 한국현대사는 혼란스럽다. 일제 식민사학을 청산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조선·부여·발해·고구려 역사가 중국 변방사라고 주장하는 중국 동북공정의 도전과 일제 침략이 한국을 근대화 시켰다고 주장하는 일본 오리엔탈리즘 부활 속

가 인류평화 건설에 기여하게 한다”는 교육법 제2조 교육목적과도 상치된다.

건국세대와 그 2세 3세가 피와 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 역사를 부끄러운 유산이라고 폄하하는 일부 전교조의 자학적인 역사 인식이 초·중·고 공교육은 물론 국민의식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분노와 증오로 얼룩진 자학사관으로 기술된 일부 한국 근현대사는 독재·부패 외세 의존의 부정적인 역사로 폄하됐다. 무엇이 일부 전교조 교사들을 그런 자학적인 역사관의 포로가 되게 했을까. 상해 임정 시절부터 시작된 뿌리 깊은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 북한의 대남 비방이 조장한 흑백 논리 수준의 선전 선동, 무비판적인 외국 이론 베끼기가 이 자학적인 역사관을 배태시킨 것이다. 좌편향 역사학자들의 왜곡된 역사연구 논문과 저술 몇 편이 국민의 역사 인식을 혼미하게 한 것은 문제의 좌편향 가설을 적극적으로 비판 검증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였다.

386 운동권 세대의 역사 왜곡을 묵인해온 국사학계의 직무 유기는 정치학·사회학·법학 등 인접 학문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의 ‘한국현대사 재인식’·연세대 한국학연구소의 ‘이승만 재평가’·교과서포럼의 ‘한국현대사의 허구와 진실’·기파랑의 ‘한국 근현대사’ 등에 발표된 정치학 사회학 역사학의 학제적 연구에 의해 한국현대사 왜곡이 대폭 수정되었다. YS~MB 정부의 교과서 왜곡에 대한 지식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국가 정체성과 한국근현대사 논의가 더 혼란스러웠다. 박근혜 정부가 교육 현장에 보급한 한국사교과서는 MB 정부가 만든 것이지만 개악의 극치였으며 독립기념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의 전시와 인사도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인 역사 인식 흥미를 드러낸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보급한 검정 한국사 교과서 4종이 유관순 열사를 누락시키고 교육부 주최 토론회에

서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가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든 영웅”이라는 망언을 할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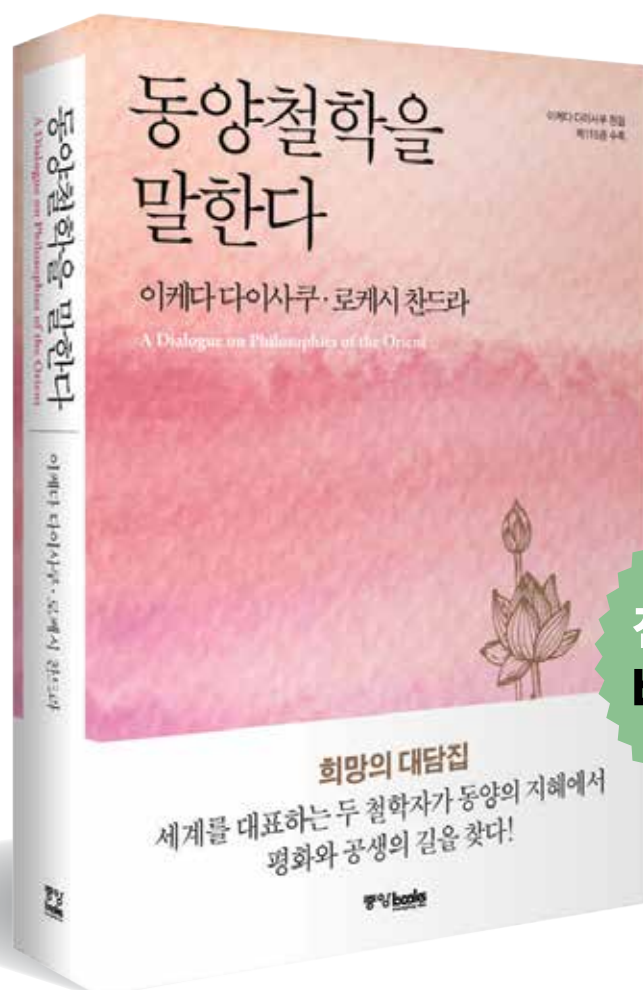
계급투쟁사관으로 기술된 한국사 교과서 오류와 사회주의 사관으로 경도된 박물관 전시도 서둘러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정배)가 공개한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YS~MB 정부의 좌편향 기술을 대폭 수정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 교과서 전면 시행을 보류했지만 국편은 새 한국사 교과서를 수정 보완해 자라는 세대에게 선진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제3 혁명을 고취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시각 도배 국사교과서 수정이 마땅

왜곡 선전선동하는 역사해석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북한군의 6·25 남침 등에 문제 제기하는 사론 등이 제기돼 국사학계에 현대사 논쟁이 불붙었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 왜곡뿐만 아니라 YS·DJ·노무현 세 정권의 이승만·박정희 정부를 폄하하는 종북자학사관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통성 혼란은 물론 세대 간 이념 갈등도 조장했다. MB 정부는 2008년 노무현 정부가 검인정 보급한 6종 국사교과서의 오류가 157건이라고 고발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배포한 MB정부가 준비

에 일부 국사학자들은 북한의 대한민국 역사 폄하에 동조하고 있어 한국현대사는 사면초가다. 역사교육은 정치가의 편견이나 학자의 대립하는 학설까지 학생들에게 주입 암기시키는 것이 아니다. 학계가 인정하고 공유한 역사인식 중에서도 학생들이 인식 가능한 것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YS~MB 정부에서 일부 전교조 교사들은 지리산 공비, 제주 4·3 사건, 순천 반란군에 대한 검증 안 된 편향된 가설을 학교 교육을 통해 일반화 시키려고 했다. “애국애족의 정신을 길러 국가의 자주 독립을 유지 발전하게 하고 나아

세계를 대표하는 두 철학자가 동양의 지혜에서 평화와 공생의 길을 찾다!



전국주요서점
베스트셀러

동양철학을 말한다
이케다 다이사쿠, 로케시 찬드라 지음
중앙북스 | 값 12,000원

이케다 다이사쿠, 로케시 찬드라가 전하는 희망의 대담집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지표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21세기에 들어서도 인류는 폭력과 분단의 힘에 끊임없이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라는 빛 뒤에는 깊은 그림자가 숨어 있고, 분단의 힘이 아직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 그리고 인간정신 그 자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박사와 나는 동양철학사에 등장하는 혼(魂)의 거인들이 격투했던 내용을 주축으로 ‘분단’을 ‘융합’으로, ‘전쟁’을 ‘평화’로 이끄는 정신적 지표를 찾아 사색을 거듭했습니다. 그러한 사색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신의 여행’을 하나로 모은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본문 중에서

안중근 의사가 서거한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 뤼순(旅順)커우 구 뤼순 감옥과 주변 관광지를 지난해 여름 둘러보았다. 뤼순 감옥 본관은 2층 건물로 되어 있다. 본관은 흰 색과 회색 기와지붕이다. 본관 건물 뒤편으로 큰 대(大)자 형태의 감옥이 붉은 벽돌로 우뚝 서있다. 뤼순 감옥은 1902년 러시아가 중국 동북 3성의 중국인을 제압하기 위해 건축했다. 러·일 전쟁 후 일본이 점령해 이 감옥을 증설하면서 일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큰 대자 형태로 개축했다. 이 감옥은 1906년부터 30년간 11개 나라 항일 운동가와 한국, 중국, 러시아인 등 2만명을 수감했다. 이 감옥 면적은 22만6000㎡에 2000명을 동시에 수감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이다.

윤재홍 본회 회우 ·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초빙교수

중국 정부는 뤼순 감옥을 “뤼순 일아(日俄) 감옥 구지(舊址) 박물관”으로 명명하고 주요 국가 문화재로 지정했다. 이 감옥은 2009년 8월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00주년을 맞아 외국인에게 개방했다. 뤼순 감옥 수감자는 1940년까지 44만5517명이나 되었다. 감방마다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등 3개 국어로 감옥의 규칙이 벽에 붙어 있었다. 감방 안의 공기는 탁했고, 냉·난방 시설이 전혀 없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 역 플랫폼에서 러시아군의 군례를 받고 있는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했다. 안 의사는 경찰에 검거되어 뤼순 감옥에 수감되었다. 1910년 2월 14일 일본 국사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144일만에 순국했다. 당시 안중근 의사의 나이는 32세였다. 안 의사는 고국에 뼈를 묻어 달라고 유언했지만 아직도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일본은 안 의사의 시신이 한국에 가면 더 거센 항일운동이 일어날 것에 대비했다. 그래서 안 의사의 시신은 다른 수감자의 시신과 함께 암매장해 버려 현재까지 시신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안중근 의사의 감방은 국사범으로 감옥을 총괄 감독하는 간수부장 당직실 옆에 있었다. 안 의사를 24시간 지켜보며 특별감시를 하기 위해 서이다. 감방 안에는 낡은 침대와 변기, 생활 도구 등이 있었다. 작은 창문에서 들어 온 빛이 겨우 안을 보이게 했다. 96년 전 안 의사의 고통스러운 수감 생활을 상상할 수 있었다. 특히 이 감옥에서 안 의사의 교수형을 집행했던 사형장은 끔찍했다. 사형장 2층에는 목매는 밧줄과 발판이 있었다. 2층 발판이 열리면 1층 아래 판자 조각으로 만든 항아리 속으로 시신이 떨어지게 되어 있었다. 이 사형장에서 1942년부터 3년간 숨진 항일 투사는 700명이 넘는다.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항복한 다음날에도 5명의 항일 애국지사를 사형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사형장에서 숨진 수많은 시신들을 판자 조각으로 만든 나무 항아리에 넣어 이 감옥 주변 땅에 매장했던 현장을 보고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이 무덤 속에 안중근 의사의 유해도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더욱 아팠다. 쇠막대기, 두 발목을 묶는 쇠사슬과 쇠못치, 수감자의 고문

한·중·러 3개국 항일운동가
1906년부터 30년간 2만명 수감

하얼빈 의거 100주년 맞아
끔찍한 사형장 등 일반에 공개



뤼순 감옥 전경. 왼쪽 윤재홍 오른쪽 안보순 사업가.



뤼순 감옥 고문실의 여러 가지 고문 도구들.

안중근 의사 흉상 등 항일독립 자료 고스란히

틀, 고문에 쓰이는 호랑이 의자, 고문을 하는 태형(笞刑) 등이 당시의 혹독한 잔인성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형식상으로 갖추어진 의무계와 교화실도 있었다. 의무계는 진찰실과 약방·병실 등이 있었으나, 치료가 어려운 중환자는 빨리 죽게 하는 “최명침(催命針)”을 놓아 죽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교화실에도 형

식상 수감자들을 교화시킨다며 승려 2명을 두었으나 이들은 수감자의 교화보다는 사상과 행동을 보고하는 대외 선전용일 뿐이었다고 한다. 이 밖에 감옥 안에는 당시 수감자들이 입었던 감색 수의(囚衣)가 누렇게 변색되어 50여 벌 전시되어 있었다. 당시 수감자들의 고통과 애환, 피땀의 흔적들을 이 수의를 통해 느

낄 수 있어 마음이 아팠다. 이 감옥의 공장은 벽돌 공장, 방적, 목공, 철공 등 15개 분야가 있었다. 수감자들은 하루 10시간 강제 노동을 시켜 많은 돈을 벌여 일본 정부에 송금했다고 한다. 특히 이 감옥 안에는 당시 수감자들의 사진과 함께 감옥의 만행에 대한 폭로 내용이 담긴 증언들이 써 있는 현판이 여기 저기 걸려 있었다. 한 중국인 수감자는 강제 노동을 하면서 부패한 쌀겨와 모래가 섞인 수수쌀밥을 강제로 먹이도록 해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폭로해 충격을 주었다. 또 한국인 수감자는 간수가 자신을 호랑이 의자에 묶어 놓고 고무판을 입에 넣어 물을 부어 배가 불러 오면 나무판으로 배를 눌러 핏물이 입, 코, 항문으로 흘러 나왔다고 한다. 벽돌을 발에 묶고 손톱 밑을 찌르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또다른 수감자들은 증언을 통해 호랑이 의자에 묶어 놓고 대나무로 죽도록 때려, 온 몸이 피딱지 투성이가 되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 밖에도 감방 안이 너무 좁아 등을 서로 맞대고 앉았고 말을 하면 밥을 주는 구멍에 손을 내밀어 끈으로 묶고 때렸고 부역 현장에서 맨발로 눈길을 뛰어 다니며 일하다 발에 동상이 걸려 지금도 상처가 남아 있다고 폭로했다. 중국 정부는 2009년 일본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와 공조 및 상호 신뢰를 위해 이 감옥 안에 600㎡ 규모의 ‘국제 항일열사 전시관’을 마련했다. 이 전시장에는 안중근 의사의 흉상을 세우고 안 의사 항일운동 사료들을 정리해 사실상 한국 독립운동가 전시관이 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 곳에는 신채호, 이회영 선생을 비롯해 유상근, 최흥식 선생 등 독립운동가 흉상과 사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특히 안중근 의사관에는 안 의사의 약력과 가족사진, 유서, 부모와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수많은 서예 유품들이 진열되어 마치 서예 전시회처럼 돋보였다. 이 가운데는 옥중에서 쓴 안중근 의사의 서예유품 한 점이 경매에서 우리 돈 7억원에 낙찰되어 안 의사의 서예 실력을 세계에 과시했다는 기록도 있었다. 한국보다 중국에서 독립 운동가로 더 높이 평가받고 있는 안중근 의사 등 한국 독립운동가의 항일 운동 사료들이 한국보다 더 잘 보관되어 있어 대한민국을 더욱 빛내고 있었다.

언론인 백세시대 연 김진섭 회우

“한국언론 100년과 동갑내기네요”

일편단심 외길 67년 봉직도 전설

— 백수를 축하 드립니다.

“1세기를 살았다는 게 가슴 뿌듯해. 세상에 나온 지 엇그제 같은데 100세를 맞았군요! 나에게 건강한 삶을 주신 부모님과 조국에 감사해. 흔히 100세를 白壽 또는 百壽라고 하는데, 白壽는 우리 나이로 100세이고, 百壽는 만100세로 상수(上壽)라고도 해요.

먼저 나를 생각해주신 대한언론인회가 고맙군요! 본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이병대 회장 이하 여러분이 존경스러워요. 새해에도 두루 다복하고 건강하여 모두가 천수를 누리기를 감축합니다. 여러분들이 건승하고 한국 언론인의 모범이 되고 대한언론이 한국 언론계의 교범이 되기를 멀리서 간곡하게 기원해요.”

인터뷰 유한준 본회 편집위원



후배 기자들이여! 기자는 사회의 목탁임을 잊지말라고 당부하는 김진섭 원로 회우.

“언론인은 국가발전의 기수이다. 정유년 원단에 평생을 언론인으로 헌신해온 본회 회우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한다.”

2017년 새해 백수를 맞은 원로 金鎭燮 회우는 미국 LA에서 본회 회우 여러분에게 謹賀新年 인사를 e-메일로 보내왔다.

언론계에서는 처음으로 100세 장수를 누린 전설의 대선배인 김원로 회우에게 구랍에 본회 회우들의 뜻을 모은 축수(祝壽)를 올리고 e-메일과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 언론계에서 일편단심 외길을 걸어오신 소회는?

“언론은 살아 있는 역사의 기록이야. 24세 약관(弱冠)으로 서울신문 전신인 매일신보 기자가 되었지. 그때 매일신보의 정신은 조국 독립과 광복에 있었는데, 일제 식민통치 때라 갈등이 많았어. 광복 이후 6·25전쟁, 4·19와 5·16혁명까지 격동기를 거치면서 언론계에 봉직할 수 있었다는 것이 큰 보람이야. 2005년 대한언론인회 자문위원을 끝으로 언론계를 떠났으니 장장 67년간 언론인으로 봉직한 셈이지. 우리 언론이 조국 광복과 독립, 산업화·민주화의 기수로 고난의 세월을 이끌면서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다는데 희열을 느끼면서 모든 언론인들이 앞으로도 국가와 사회발전을 이끄는 목탁으로서 더욱 분발하고 무거운 소명의식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새해 원단에 덕담으로 드리네.”

일제시대 기자로 출발

— 일제 강점기 때 매일신보는?

“초임 기자로 뛰던 매일신보는 일제 강점기 때 양기탁 선생과 영국인 E.T Bethell 등이 독립과 구국의 기치를 내걸고 <대한매일신보> 제호로 간행한 언론이었다.

고종은 Bethell에게 裵說이라는 한국 이름을 하사하셨지. 일제총독부가 강제 매수하여 <매일신보>로 제호를 바꾸고 총독부 기관지로 발간하였지만, 우리는 일제 강점기 식민통치에서도 한국인의 얼을 심어주는 데 나름대로 고심했지. 이인직, 조중환, 이해조 등이 신소설을 발표하고, 이광수가 ‘무정’ ‘개척자’ 등을 연재하면서 인기가 대단하였어. 광복 후 <서울신문>으로 제호를 바꾸어 오늘에 이르렀지.”

일제 강점기에 ‘매일신보’ 기자로 출발 지금도 원기왕성…LA살며 한국신문 읽어

— 언론인으로서 추억에 남는 일은?

“나를 친일파로 매도한 사람들 때문에 심적인 고뇌가 많았지. 4·7언론인회 결성, 좌파들이 인촌(동아일보 김성수)을 친일파로 몰자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하여 ‘당신들은 그때 출생 전인데 단순한 기록으로만 따지지만, 나는 살아있는 증인이다’라고 격론을 편 일, 1950년 10월 20일 종군기자로 평양 입성기를 쓴 일, 부산발~서울행 대한민국 항공사(KNA) 여객기가 1958년 2월 16일 공중 납치

되었을 때 동승했다가 국내·외 언론과 유엔에서 ‘유례없는 하이재킹’라면서 무조건 석방을 요구해 18일만에 귀환한 일, 이기붕의 IOC 위원 선출 일화 등이 파노라마처럼 흐르는군요. 총독부 시절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 ‘내선일체(內鮮一體)에 반발’하고 ‘낙토(樂土)는 온다’고 외쳤던 일은 평생 잊을 수 없어. 고인이 된 고향 선배 홍종인, 동갑내기 유진오, 이하윤, 그리고 김창문, 이상백, 정비석 등 잊을 수 없는 이들이 다시 보고 싶어요.”

— 후배 언론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언론은 공기(公器)야, 소요와 선동은 곤란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밝혀주는 일에 충실해야 되

청하지 않아요. 현실을 바로 보고 법대로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워. 한국의 탄핵 정국은 일종의 교통사고인데, 사실 보도보다는 폭로성으로 흘러가는 느낌이야. 이곳 한인들은 물론, 미국인들도 한국 정국과 사회현실에 대해 불만이 많아요, 눈 밖에 난 셈이야.”

문단과 체육계서도 활약

— 문학과 체육계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지요.

“기자로 뉴스를 전달하고 수필가로 문필을 펴고 체육계에도 얼굴을 내밀었지. 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위원으로 1947년부터 93년까지 46년 동안 활동했고, 한국체육인 총무이사(86년), 대한체육회 원로체육인 자문위원으로 관여하였어.”

金鎭燮 원로 회우는 1918년 3월 1일 평양 명문가(家)에서 출생, 일본 메이지 대학 법학과를 나와 1942년 서울신문 전신인 매일신보 기자로 언론계에 투신한 이래, 광복 후에 동아일보 기자, 중앙일보(현 중앙일보와는 다름) 편집부 국장-국장(53~56년), 세계통신 편집국장(59년), 통화통신 편집국장(60년), 서울신문 기획실장(62년), 경향신문 기획심의실장(75년) 등을 거쳐, 4·7언론인회 사업위원, 본회 자문위원(2004~5년) 등을 역임하였다. 화랑무공훈장을 수상했고, 『한국전쟁 종군기자』, 『한국신문사설집』 등 편저가 있다.

지, 어떤 선동에 이끌리면 안 돼요, 폭로성 기사는 국익에 백해무익해, 내가 보기에는 기자라는 사명보다는 회사의 직원 같아.”

— 미국에서의 생활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서울에 홀로 있었는데, 딸들이 오라고 성화를 부려 2009년 연말에 LA 아들집으로 왔지. 미국에는 2남 2녀와 13명의 손자손녀 외손이 있어, 큰 손자는 워싱턴대학 교수로 재직중이지.

일기 쓰고 사색하며 동아, 조선, 중앙일보를 인터넷으로 보면서 고국 소식을 접하지, TV는 너무 선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시

경제는 어른의 꿈이 자라는 곳이기에...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놀고, 청소년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놀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경제라는 큰 세계에서 놀입니다.

경제라는 놀이터에는 신기한 일도 많고 놀라운 일들도 가득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른들이 꿈을 꾸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경제를 보는 균형 잡힌 시선을 배우며,

그속에서 새로운 꿈과 기회를 찾고, 성공의 열쇠를 발견하니까요.

그렇기에 한국경제신문은 어른의 꿈을 책임진다는 소명감으로

기사 하나하나에 더 나은 통찰과 비전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른의 꿈이 자라는 신문
한국경제신문



날아라 대한민국! 정의의 날개를 타고



천년세월 즐기찬 소나무
사시사철 시원한 상록수처럼
굳건하게 언론정필 기상을 펴라!

사진 박문두 본회 편집위원

- 경북 경주시 배동 73-12 신라 역사가 시작된 삼릉 소나무숲에서

새해 祝詩

찬란한 창공을 보라

유자호

창호가 부열게 밝아오고 있다
조선종이(韓紙) 너머
황량한 겨울의 눈두렁 너머
울울한 소나무의 가지 사이로
햇살의 전위대가 당도하였다
나는 두 팔을 벌리고
그들을 향해 뛰쳐 나간다
오라!
미지의 시간들이여
순금으로 이글거리는
눈부신 아침 앞에서
나는 소년처럼 가슴 설렌다
눈 덮인 산맥을 넘어
대숲을 건너
저 긴 강들을 건너
꿈의 말을 타고 달려가리라
온몸에 가득 맺힌
땀방울을 털어내면서
새로운 역사가 굽이쳐 오는
찬란한 창공을 바라보리라.

丁酉年 약사

올해는 탄핵심판 · 대선이 이슈



기원전 37년 이후 올해 2017년으로 33번째 맞는 丁酉年은 붉은 닭띠 해이다. 금년 정유년에는 현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대선 및 개헌정국 등 대사(大事)들이 가로 놓여 있다. 과거 정유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역대 정유년을 장식했던 주요 사건들을 월별로 다시 정리한다.

▶이도(李祹:세종대왕) 탄생 ; 1297년 5월 15일. 조선 제4대 왕.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선정을 베풀었으며, 두만강 하류에 6진과 4군을 두어 여진족을 축출하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정하여 조선왕조의 기틀을 다진 성군이 됐다.

▶정유재란 발생 ; 1597년 7월 15일. 임진왜란은 임진년에 왜병이 침략한 1차 전쟁(1592년 4월 14일~1593년 2월 18일)과 2차 전쟁인 정유재란(1597년 7월 15일~1598년 11월 18일)으로 구분된다. 1차 전쟁 때는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김시민의 진주대첩, 권율의 행주대첩 등 3대 대첩으로 왜군을 격퇴했다.

당파싸움과 원군의 모락으로 삭탈관직 되었던 이순신이 백의종군하

여 명량해전, 노량해전 등의 대첩을 거두고 왜군을 격퇴하여 1598년 11월 18일 왜군이 퇴각하면서 정유재란이 끝나고 7년간의 임진왜란이 종전되었다. 이순신은 마지막 대전인 노량해전에서 순국했다. 시호는 충무공.

세종탄생 정유재란 · 명량해전 대첩 신문의 날 · TV방송 시작도 닭의 해

▶명량해전 대승 ; 1597년 9월 16일. 백의종군한 이순신은 남은 거북선 12척을 이끌고 전남 해남~진도 사이 울돌목(명량)에서 왜선 133척을 공격하여 대격전 끝에 대승을 거두었다. 명량대첩의 승리로 왜적은 패주하고 이순신은 제해권을 회복 장악하였다.

▶대한제국 성립 ; 1897년 8월 1일. 조선 말기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자주독립국임을 천명하였다. 고종은 대한제국 황제로 1910년

8월까지 13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일제의 강압적인 한일합병조약으로 멸망하였다.

▶신문의 날 제정 ; 1957년 4월 7일. 신문의 사명과 책임 등을 자각하고 강조하기 위해 신문인들이 <독립신문>이 창간된 날을 기념하여 4월

7일을 신문의 날로 정하였다. 매년 이 날을 언론의 생일날이자 언론인들의 생일날로 자축하며 전국의 모든 신문들이 이날 휴간하고 각종 축하 행사를 벌인다.

▶한-영 대사 교환 ; 1957년 4월 24일. 한국과 영국은 외교 공사를 대사로 승격하고 상호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며 국제 사회에서 두 나라 지위향상에 관한 협조를 다졌다.

▶한국 TV방송 시작 ; 1957년 5월 16일. 한국방송공사(KBS)는

56년 10월 제1방송(HLKA)과 제2방송(HLSA)으로 2중 방송을 개시하고 57년 5월 대한방송주식회사(DBC)로 개편하여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였다. 세계의 TV 방송 시작은 1928년 미국 WGY국의 실험방송이 그 시초이다.

▶부산에 큰 불 발생 ; 1957년 6월 23일. 송유관이 터져 큰 불이 일어나 50여명이 불에 타 숨지고, 가옥 100여 채와 59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최남선 사망 ; 1957년 10월 10일. 육당은 일본 유학을 다녀온 사학자, 독립운동가로 3.1독립선언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일제 배척과 독립 사상을 고취하는 글을 신문에 발표하고 한일합방론을 반대하였다.

▶남북 인사 생존자 판명 ; 1957년 11월 18일. 6.25전쟁 이후 남북된 생존자 338명의 명단이 국제적십자를 통해 확인되었다.

유한준 본회 편집위원

2016년 송년회 · 팔순연 盛了



2016년 丙申년을 마무리하는 송년회 겸 傘壽(산수:팔순) 회우 축하연이 구랍 22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성대히 열렸다. 오전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날씨가 쌀쌀

한 탓으로 예상보다 적은 회우가 참석했으나 그런대로 오붓한 자리가 됐다.

이병대 회장은 송년사에서 지난 2월 1일 출범한 이래 회원 복지사업에 큰 비중을 두어 3월부터 안과 백내장 수술을 본인부담 없이 받게 했고 무료정신건강과 무료 한방 침술 봉사를 시행했다고 보고했다. 백내장 수술을 무료로 받은 회우는 53명에 이른다. 또 은평구청과 협의하여 본회가 2019년 준공 예정인 언론기념관을 관리 운영하기로 한 것도 올해의 성과로 꼽힌다.

올해 만 80세를 맞은 회우들에게 축하금을 수여하였다. 계창호 회우가 팔순 대표로 인사말을 하고, 즐거운 식사를 마친 후 송아지 가죽 장갑을 기념품으로 받고 일찍 자리를 떴다.

본회 바둑대회 정기정 회우 전승 우승

대한언론인회 친선바둑대회가 구랍 12월 9일 종로3가 세계기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는 추첨을 통해 토너먼트식으로 게임상대를 맞이했고 풀리그로 치러진 대국결과 우승자는 정기정 전 바둑회 회장이 연전연승을 기록하며 무패의 전적을 보여주었고, 준우승은 천승준 전 동아일보 편집위원이 1패만을 기록했으며, 3등은 최연석 전 신아일보 문화부기자가 고수에게 한수 배웠다며 석패의 아쉬움을 달랬다.

백환기 대한언론인회 바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처음으로 바둑회 회장을 맡게되어 책임이 무



겁다”며 바둑회의 발전을 위해 2개월에 한번씩 만나 친선 리그를 치름으로써 바둑회의 활성화를 모색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GS안과 수혜 회우 83명 돌파

언론인회 회우들에게 노안 및 백내장 검사 무료, 백내장 수술 본인부담 무료 혜택을 주고 있는 강남 역삼동 GS 안과에서 지난해 3월 28일 실시 이래 구랍인 12월 8일 현재 무려 83명의 회우가 혜택을 받았다.

무료 검사를 받은 회우가 30명이었고, 검사 후 백내장 수술을 받은 회우가 53명에 이른다.

대부분이 양쪽 눈 모두 수술을 받았다. 수술 받

은 회우들은 이구동성으로 바닥에 안 보이던 머리카락이 보이고 친구의 깊은 주름이 보이고, 가기를 꺼리던 미술 전시회에도 용기 내어 가서 좋은 그림을 감상하면서 좋은 세상을 보게 됐다고 기뻐한다.

안과 예약 전화 02-3469-0900 강남역 2번 출구 앞 미진빌딩 8층 이메일 : gs-eye@naver.com

본회 산악회 정기산행



대한언론인회산악회(회장 최귀조)는 11월 17일 전주 모악산을 등정했다. 이날 산행에는 정운

전주 모악산 등정

종 안종우 이상호 전 회장 등 34명이 참가해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회원들은 귀로에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최명희 기념관과 오목대를 둘러봤다. 모악산은 전주시 중인동에 위치한 해발 794m의 우리나라 100대 명산으로 산악인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모악산이라는 이름은 정상에 있는 바위가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형상이어서 붙여진 것으로 기운이 좋은 산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충한 본회 회우 찬조금 100만원 쾌척



김충한(전 한국일보 부사장·현 이엔엑스 회장) 회우가 본 회 발전에 써달라고 찬조금 100만원을 쾌척했다. 새해로 만 80세를 맞는 김 회우는 본회 상담역으로 수시로 도와주며, 혈기 왕성하게 현역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굵직한 전시회와 이벤트 사업 대부로, 젊은 시절 그 모습대로 열심히 뛰는 노익장 사업가다.

언론사 인사

동아일보, 편집국장 김정훈



김차수



김정훈



박성원

동아일보가 김차수 편집국장을 동아 채널 A 상무로 전보하고 후

임에 김정훈 동아 채널A 보도본부 부분부장을 편집국장으로 임명했다. 박성원 편집부국장은 출판국장으로 승진발령됐다.

경향신문, 김민아 편집국장 선임



경향신문은 김민아 논설위원을 편집국장으로 임명했다. 김 논설위원은 사원 임명동의제 투표에서 유권자 233명 중 174명(80.18%)의 찬성표를 얻어 신임 편집국장에 당선됐다.

경향신문 70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편집국장으로 선임된 김 국장은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출신으로 1990년 경향신문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국제부, 문화부 기자를 거쳐 특집부장, 사회부장을 역임했다.

문화 방송 명PD로 광주MBC 사장을 역임한 김 포천 전 광주비엔날레 이사장의 딸이다.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퇴사



중앙일보는 김교준 발행인을 대표이사 겸 발행인으로, 이하경 논설주간을 주필 겸 중앙종합연구원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또 편집인 겸 JTBC 보도총괄 겸 뉴스를 혁신 추진단장에 오병상, 논설주간에 이철호 논설위원 실장을, 논설위원 실장에는 최훈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중앙일보 편집국장에는 남윤호 편집국장 대리를 임명했다.

JTBC 보도국장에는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발령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퇴사했다. 김 전위원은 그동안 보수논객으로 논설, 칼럼을 쓰고 방송출연도 했는데 이번에 퇴사해 회사와의 노선갈등인지가 화제가 됐다. 또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은 그 자리에 유임됐다.

홍용수 회우 자산 관리 특강

1월 12일, 프레스센터



자산관리 특강 연사 홍용수 회우.

인기리에 열리고 있는 홍용수 자산관리 특강이 새해에도 다음과 같이 열린다. 돈을 버는 일 뿐 아니라 소유 자산을 어떻게 잘 지키면서 세금도 아끼고 여생을 보다 편하게 보낼 수 있는지 지혜를

터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에는 임대상가나 빌딩을 어떻게 매매해야 세금을 덜 내는지, 임대로 관리하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지를 세세하게 짚어서 가려운 곳을 다 긁어 줄 것이다.

• 일시 : 2017년 1월 12일 (목) 오후 2시 ~ 4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2층 소강의실 • 주제 : 현명한 상가, 임대부동산 투자 및 관리

회우동정

개인 사무실 오픈



김한길 (전 대구일보 부국장 겸 사회부장) : 여의도를 떠나 이촌동 옥탑방에 개인 사무실을 차렸다. 책도 읽고 쉬기도 하는 공간이다. ☎ 790-1503, HP.010-4228-3968

오지호 그림 강의



이구열 (전 대한일보 문화부장, 문화재위원) : 최근 육군포병학교 고등군사반에서 열린 <오지호의 6. 25 전쟁 기록과 김풍익 중령의 미아리 전투>에 대해 강의했다. 오지호 그림은 6. 25 당시 북한 탱크 부대가 밀려온 미아리 전투에서 필사적으로 방어한 김풍익 중령의 장렬한 전투 모습을 담았다.

한우회 회장 피선



홍원기 (본회 고문, 전 한국일보 감사) : 지난 12월 5일 프레스클럽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한국일보 사우회 총회 겸 송년회에서 제재현 회장 후임으로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년.

방송기자클럽 공로패



이철영 (전 KBS사진부 부다페스트 특파원) : 구랍 12월 9일 프레스센터 19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2016 한국방송기자클럽 시상식. 송년회에서 공로패를 받았다.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방송기자클럽 행사 때마다 좋은 사진을 촬영해준 공로로 받았다.

입회비 ·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2016년 11월 20일 ~12월 25일)

<찬조금>

홍원기 한기호 노재성 백승대 강용식 권기진 홍인근 김한길 이 형 신동식 유재철 이흥기 이향숙 김 집 각 10만원

<연회비>

김기원(17), 이태교(18), 권영국(17), 심상대(16), 김승한(15), 안상현(16), 윤석웅(16), 김세경(16), 홍성현(16), 정기정(16), 조성하(16), 이재승(16), 도준호(16),	박진서(16), 김한길(16), 김의수(16), 박성만(17), 서옥식(17), 최신희(16), 양성목(16), 김준하(16), 한기호(16), 조규만(16), 신동철(17,18), 송선무(16), 정두진(16),	박준구(17), 윤기로(16), 김영길(17), 허동진(15,16,17), 정창기(17), 유한준(17), 김 화(16), 박명근(16), 최대훈(16), 이성호(16), 이우진(16), 송선무(16),	심재복(19), 권도홍(16,17), 박갑술(17), 이병대(16,17), 노정환(6만원), 김호곤(16), 엄영섭(16), 동문성(16), 조덕일(16), 안평선(16), 신경식(16,17), 배병휴(16),	박우정 (17,18,19), 한동희(15,16), 이 휘(16), 박영길(16), 이두한(16), 이 선(16), 고수웅(16), 이종준(16), 윤익한(16), 이용화(16), 최희조(16), 계창호(16,17)
--	---	---	---	---

* 11월 입금하신 코리아포 님, 12월 회비 입금하신 노정환 님 연락 바랍니다.

박제균 동아일보 논설위원 관훈클럽 제64대 총무선임



관훈클럽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총회를 열고 박제균(朴濟均) 동아일보 논설위원(사진)을 제64대 총무로 선출했다. 신임 총무의 임기는 2017년 1월 11일부터 1년간이다. 관훈클럽 감사에는 이도운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 박창익 세계일보 정치부장이 선출됐다. 박제균 신임 총무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파리 특파원, 정치부장, 채널A 보도본부장 등을 지냈다.

‘취재현장의 목격자들’ 구치소에서든 구독

대한언론인회가 발간한 ‘취재현장의 목격자들’이 각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는 가운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모 씨가 책 1부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는 모 대기업의 전무이사로서 재직하다 퇴직, 자기 사업 준비를 하던 중 재직하던 회사 사주가 구속되자 그에 연루되어 누명을 쓰고 2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길홍 회우 별세



김길홍(전 경향신문 부국장) 회우가 12월 4일 별세했다. 향년 74세. 안동 출생으로, 외대 영문과 졸업 후 신아일보기자로 79년 입사. 정치부장, 북한부장을 거쳐 경향신문으로 옮겨 부국장까지 지낸 후 정계에 입문했다.

김종범 회우 별세



김종범(전 경향신문 이사) 회우가 지난 12월 24일 오후 1시 영면했다. 향년 83세. 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33년 출생으로 58년 경인일보 기자로 출발했다. 이후 대한일보 경제부장, 코리아헤럴드 편집국장, 경향신문 이사를 거쳐 인쇄업에 종사했다.

박재권 회우 별세



박재권(전 내외경제 편집국장) 회우가 12월 12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1927년 인천송도 출생으로, 연세대 졸업 후 중앙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 이후 자유신문, 세계일보, 다시 중앙일보를 거쳐 경향신문 경제부장, 매일경제 취재부장, 서울 경제 취재부장, 부국장, 내외경제 편집국장을 지냈다.

박동선, 최창봉 회우 별세

박동선 (전 KBS 진주방송국장) 회우 12월 29일 별세 (좌)
최창봉 (전 MBC 사장) 명예회우 12월 29일 별세 (우)



사우회 소식

한우회, 송년회 임원 선출

한우회

구랍 12월 5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총회 겸 송년회를 가졌다.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 장:홍원기
부회장:신상석, 김명식, 짐진웅, 문창재

신아사우회, 송년회 성료

신아사우회

총회 겸 송년회가 구랍 6일 오후 1시 서울 서소문 배재반점 중식당에서 회우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윤 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우회 발전에 회우들이 적극

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최근 작고한 회우 김길홍 고문과 장기효 전 회장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렸다.

헤럴드미디어, 윤익한 회장 재선출

헤럴드미디어

총회가 구랍 7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렸다. 현 윤익한 회장(본회 상담역)을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재선출했다.



◀ 주소 변경 ▶

최일영 회우 = 서울 은평구 은평로 11길 6-15 (응암동) 세영아파트 303호

정운종 회우 = 10406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380길 25-10, 202호 (정발산동)

서병호 회우 = 서울 성동구 매봉길 50, 111동 502호 (e-편한세상 옥수파크빌즈)

째 재판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독서로 마음을 달래고 있는데 일간지에 소개된 책 기사를 보고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본회는 즉시 책을 우송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빌었다.

월간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李炳大**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李享淑**
- 편집위원장 **朴錫興**
- 편집국장 **崔命宇**
- 발행처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1405호 (프레스센터)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본회, 중앙추모공원과 30%할인 계약

‘그날’ 이후 당신의 永眠 더욱 편안히



대한언론인회 회원들이 추모공원묘지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언론인회는 지난해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소재 중앙추모공원 측과 대한언론인회 회원에게 특별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 계약에 따라 대한언론인회 회원은 이 추모공원을 이용시 대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고 부부가 함께 이용할 때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 문을 연 중앙추모공원에는 납골당을 비롯하여 최근 유행하고 있는 잔디장 및 수목장을 갖추고 있는데 위치와 장례방법에 따라 1인당 1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가격이 다양한데 기존 추모공원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서울시청에서 80Km지점에 위치해있어 자유로로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약 70분 소요되는데 관심있는 회원은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031-833-7737 · 회보광고 참조)

- 현장을 방문하고 싶은 회원은 추모공원이나 본회에 연락을 하시면 단체로 현장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을 벗삼은
영혼의 안식처

7천평의 넓은 대지에
잔디장, 수목장, 봉안당
모두 갖추어진
국내 최초, 최대의
친환경 추모공원입니다.

대한언론인회 회원에게 착한 가격으로 제공!!

영혼의 평안함이 함께하는 **중앙추모공원**



봉안당



수목장



잔디장



고객상담전화 031-833-7737, 7738

주소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백석리 313-1(마유로 58-38)
E-mail : cmp5838@naver.com / Fax : 031-835-7737



함께
커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광고산업이
함께 커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영 미디어랩 코바코-
방송, 통신, 광고의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더 큰 내일을 이끌어하겠습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